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2023-01

정책연구

A Study on Income Tax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of Artists

차민경
황아람
안종석
김재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ncome Tax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of Artists

차민경·황아람·안종석·김재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김재중 한미회계법인 연구원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연구 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예술인 또한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는데, 세금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음
 - 특히 예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는 ‘소득세제’인데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리 예술시장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점차 산업화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 프로젝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종사자 및 관련 기업·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증대하는 상황
- 예술 산업의 성장은 더 많은 거래와 수입의 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예술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인 소득세가 예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예술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세제도인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우리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의 활동 특징과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함
-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사례 조사, 예술계 종사자 인터뷰, 설문조사로 진행함

2.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와 쟁점

가.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와 현황

-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것을 조세제도는 소득세인데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그 외에도 국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국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조세제도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문화예술향유 증진(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접대비)이나 후원 활성화(문화예술후원자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 분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 그러나 정작 예술인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예술 활동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
 - 예술 분야에서 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체로 적었기 때문이며,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소득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임
 - 그러나 예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며 세금 제도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고, 예술인의 직업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예술 활동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나.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적용 현황과 쟁점

- 예술인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즉 소득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대부분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이 주로 적용받는 소득세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제도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데, 그 외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소득세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세액이 결정됨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외)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필요경비를 적용할 때는 소득 형태별로 다르게 경비를 적용함. 기타소득은 일괄적으로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그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됨

- 예술인은 준비 기간이 긴 업무 특성상 해마다 소득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소득변동성이 큰 경우 누진세율체계에서 더 높은 세금 부담을 가지게 됨.
 - 우리나라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입의 금액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수입이 한동안 없었던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해당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음
 - 같은 수준의 연봉으로 30년을 일하는 자와 그 30년간의 연봉 총액을 3년에 벌어들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수입이 없는 자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세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임
 - 이러한 소득변동성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특정 연도에 갑자기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다음 해에 소득이 크게 줄더라도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보험료가 환산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됨. 이는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소득금액변동 보험료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
- 근로자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 매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고 있지만, 예술인과 같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는 노란우산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두 가지뿐임
- 배우와 가수의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보다도 공제율이 낮은 상황임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등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출퇴근 비용 외에 필요경비가 거의 없지만, 배우와 가수는 의상 구입이나 대여, 메이크업, 소품 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은 사업의 수입에서 개인적으로 충당하고 있음

- 개인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의 격차가 매우 큰데, 주요 경비로 지급한 실비가 상당히 적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부담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 이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을 구분하는 경계선 부근에서 소득이 약간만 상승하여도 세부담이 크게 뛰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공평한 과세라 보기 어려움

3. 해외의 예술인을 위한 조세제도 사례 분석

가. 호주

- 호주는 예술인과 같은 전문가들이 해마다 소득변동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을 가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소득과세제도(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를 도입함
 - 평균소득과세제도는 과세연도의 소득이 이전 4개 연도의 소득 평균보다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임. 변동성이 큰 특정 인적용역 소득의 세부담 평탄화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예술인을 비롯한 특정 전문가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함
-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소득발생 당해 연도 과세원칙과 누진세율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저소득 예술인의 세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고소득 예술인의 납세 유도에 효과적임
- 그 외에도 호주는 인적용역소득에 있어 폭넓은 비용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재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실 점유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용 자동차 운영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도구·장비 구입비와 사용료, 기타 자산 비용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

나.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1969년부터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Artists' exemption from income tax)’라는 세금 경감 제도를 실시 중임.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연 5만 유로(한화 약 7,300만 원)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5만 유로를 초과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창작 활동에만 적용되는 면세 혜택으로 책 또는 기타 글쓰기(books or other writings), 희곡(plays), 음악 작곡(musical compositions), 그림 또는 사진(paintings or other similar pictures), 조각(sculptures) 등의 창작 활동에만 적용됨
 - 창작 예술가(creative artists)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업(original and creative work)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실연 예술가와 연출, 감독 등 해석예술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예술 지원제도의 하나로 특히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지만, 끊임없이 제도 폐지 논란을 겪고 있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도 폐지 논쟁의 쟁점이며, 예술인은 별도의 직접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음

다. 스페인

- 스페인은 ‘예술가 지위 향상을 위한 국왕령’의 발표의 근거가 된 「예술가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를 제안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임
- 스페인의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는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제안되고 있음.
 - 첫 번째는 변동 소득에 기반한 평균화의 도입으로 최근 2~4년간 신고된 소득에 단순산술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평균값이 최대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평균값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임

- 두 번째는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예술 활동으로 발생한 연소득 신고액을 3으로 나눈 값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평균 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임
- 세 번째는 불규칙 소득 30% 면제의 방식으로 불규칙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의 70%만 세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임
- 예술인 소득평균화 제도는 아직 제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예술인의 원천징수세부담 완화 제도가 먼저 시행될 예정임

4. 예술 분야 소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및 쟁점

가.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며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 FGI는 국악,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미술 장르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동일한 분야의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함

가. 조사 결과

- 예술인의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35.%)과 기타소득(19.2%)이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근로소득이 31.0%를 구성하고 있었음
- 예술인들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천징수로 지급한 것이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음
- 종합소득세의 신고 경험은 높지만 정확한 세금 신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나 교육 등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 예술인들의 소득변동성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났는데, 최저 연소득 721.1만 원에서 최고 2974.9만 원으로 평균 2253.8만 원의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예술인은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주로 교육·훈련비, 임차료,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실연 분야 예술인도 상당히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경비율을 인정받는 창작 분야보다도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었음

5. 예술인을 위한 소득세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의 제언

가. 예술인의 합리적인 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제공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비롯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노란우산공제와 기장세액공제만을 적용하고 다른 세액 공제는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로자에게만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은폐가 어려운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가 그동안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최근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4대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소득의 은폐나 탈루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 상황임
-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러한 세액공제는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예술인을 비롯한 사업소득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전세대출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의료비’ 또한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연·영상 분야와 같은 실연 분야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비가 직업생활과 관련성이 높지만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배우와 가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필요경비율 인정 정도가 낮으며 일반근로자보다도 낮은 상황임. 배우나 가수의 경우 신체를 사용해 표현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소요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실연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예술인 직종 간 합리적인 경비 인정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프리랜서의 주요 경비에 대한 인정 폭이 매우 좁은데, 경비 인정의 폭이 적다 보니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함.
 - 호주의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의 비용 공제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적용역소득의 주요 경비 인정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업무 형태가 생겨나며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술인 등의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비 인정 가이드 마련이 필요함
- 예술인들의 높은 소득변동성은 누진세율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에 불리하므로, 호주와 스페인은 소득 평탄화의 방식을 도입 또는 도입 검토 중임
 - 당해 연도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나 스페인 등은 소득평균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과세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여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원천징수 당시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진세율을 과도하게 적용받는다고 판단될 때 해당 납세자가 소득평균화 적용 신청을 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예술인들의 소득금액변동 보험료조정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퇴직(해촉)증명원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나. 예술인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개인 생활 비용과 직업 활동의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손쉽고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의 분리’임
 - 개인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과 직업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인 생활의 비용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경비 인정을 신청할 영수증이 명확해짐
- 예술인들은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장부의 기장과 영수증 관리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예술 분야가 산업화의 면모를 갖추어갈수록 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2장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와 쟁점	11
제1절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와 현황	13
1.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	13
2. 예술 분야의 조세제도 논의의 현황과 소득세 논의의 필요성	24
제2절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적용 현황과 쟁점	48
1.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적용 현황	48
2.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문제점	65
3. 근로자에 비해 부족한 세액 공제 항목	68
4. 배우 및 가수에 대한 경비 인정율의 형평성 문제	69
5.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의 격차의 문제	73
제3장 해외의 예술인을 위한 조세제도 사례 분석	77
제1절 호 주	79
1. 호주의 인적용역소득 과세원칙	79
2.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적용을 통한 세부담 평탄화	81
3. 폭넓은 인적용역소득 비용 공제 적용	86

제2절 아일랜드	88
1.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88
2.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적용 기준	89
3.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성과 및 한계	94
제3절 스페인	99
1. 예술가 지위 향상을 위한 국왕령의 발표	99
2.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의 제안	101
3. 예술인의 원천징수세 부담 완화	105
4. 공공연금과 예술 활동 양립을 위한 건의	10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8
제4장 예술 분야 소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및 쟁점	111
제1절 조사 개요	113
1. 조사 목적 및 설계	113
2. 응답자 특성	115
제2절 조사 결과	117
1. 예술인 소득의 유형과 세금 인식 현황	117
2. 높은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부담 및 사회보장비의 증가	123
3.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항목의 부족 문제	128
4. 세금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	13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46
제5장 예술인을 위한 소득세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의 제언	149
제1절 예술인의 합리적인 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51
1.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공제 항목의 추가	151
2. 예술인 직종 간 합리적인 경비 인정율의 조정	153
3. 주요경비 인정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필요	155
4. 소득평균화를 적용한 소득세제 도입의 검토	158
제2절 예술인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165
1. 개인 생활과 예술 활동의 비용을 분리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	165

참고문헌 / 171

ABSTRACT / 175

부록: 설문지 / 177

표 목차

〈표 1-1〉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명단	8
〈표 1-2〉 예술계 종사자 FGI 인터뷰 명단	9
〈표 2-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	14
〈표 2-2〉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18
〈표 2-3〉 예술 분야 공급 부문 관련 조세지원 내역	25
〈표 2-4〉 예술 분야 사용자 관련 조세지원 내역	27
〈표 2-5〉 연도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및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33
〈표 2-6〉 「문화예술후원법」의 조문별 주요 내용	37
〈표 2-7〉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2017년~2022년)	39
〈표 2-8〉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수입 현황(2017년~2021년)	39
〈표 2-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0
〈표 2-10〉 공연의 매입 및 매출 요소	43
〈표 2-11〉 소득세의 세액 결정 과정	49
〈표 2-12〉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	50
〈표 2-13〉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	56
〈표 2-14〉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59
〈표 2-15〉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59
〈표 2-16〉 2022년 귀속 경비율 - 예술인 및 예술 활동	63
〈표 2-17〉 근로소득공제율	64
〈표 2-18〉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67
〈표 3-1〉 호주의 소득세의 과세체계	80
〈표 3-2〉 2004~2013 아일랜드 예술인 소득 면세 비용 및 청구자 수	95
〈표 4-1〉 조사 개요	114
〈표 4-2〉 FGI 참여자 명단	115
〈표 4-3〉 응답자 특성	115
〈표 4-4〉 예술인 소득의 유형	119
〈표 4-5〉 예술인의 세금 납부 방법(중복 응답)	122

〈표 4-6〉 예술 활동 소득이 가장 많았을 때의 연 소득	124
〈표 4-7〉 예술 활동 소득이 가장 적었을 때의 연 소득	125
〈표 4-8〉 예술 활동 연 최고 소득과 최소 소득의 차이	125
〈표 4-9〉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129
〈표 4-10〉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130
〈표 4-11〉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130
〈표 4-12〉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131
〈표 4-13〉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132
〈표 4-14〉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132
〈표 4-15〉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133
〈표 4-16〉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133
〈표 4-17〉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134
〈표 4-18〉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135
〈표 4-19〉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135
〈표 4-20〉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135
〈표 4-21〉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14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10
[그림 2-1]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 추이(2016년~2021년)	38
[그림 2-2] 예술인 소득의 업종·수입금액별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과의 비교1)	70
[그림 2-3] 예술인 소득의 업종·수입금액별 실효세율 - 근로소득과의 비교	72
[그림 2-4] 단순경비율(기준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	74
[그림 4-1] 개인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118
[그림 4-2]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인지 정도	120
[그림 4-3] 개인소득 세금 납부 방법(중복 응답)	121
[그림 4-4]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개인 소득이 가장 많았을/적었을 때의 연 소득	124
[그림 4-5]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129
[그림 4-6]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131
[그림 4-7]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134
[그림 4-8]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139
[그림 4-9]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중복 응답)	141
[그림 4-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을 준 대상(중복 응답)	142
[그림 4-11]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중복 응답)	142
[그림 4-12] 종합소득세 미신고 이유(중복 응답)	143
[그림 4-13] 세금 관련 정보 인지 경로(중복 응답)	144
[그림 4-14]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 응답)	14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활동에는 세금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세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예술인 또한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세금을 부과받는다. 예술 활동과 관련한 과세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예술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소득세, 예술 법인의 활동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세금은 의외로 예술인들의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모든 예술 활동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모든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업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 예술 분야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예술정책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예술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과 권리보장에 집중해 왔다. 예술 분야에 적용되는 조세 관련 논의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소비 진작이나 민간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주로 예술 활동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세금보다는 소비자나 후원자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한 시도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은 아직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는 개인이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예술 활동 그 자체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제가 예술 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소득세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예술인들이나 사업자가 창출하는 소득의 수준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관련 연구나 조사도 거의 없어 예술 활동과 관련한 소득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술인들의 활동 특징을 잘 반영하여 적용되는지,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데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예술인의 복지나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 지원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창작 준비금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사회보장제도 안으로의 포섭,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 공공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예술인의 예술 활동 및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소득세제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다.

최근 우리 예술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산업화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술 프로젝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 및 관련 기업·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증대하는 상황이다. 예술 분야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 예술 분야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술인들의 수입과 지출의 폭이 넓어지고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도 매우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예전에는 수입과 지출이 매우 단순하거나 항목이 많지 않았다면, 현재에는 수입과 지출 항목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경비 인정과 관련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경우 법인이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 형태로 인해 경비 인정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소득세에 있어 합리적인 과세 구조를 적용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고 업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고용 또는 업무 형태에 적용되는 사회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대표적인 독특한 업무 형태를 가진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많은 사회제도의 일반 원칙과 다른 업무 방식으로 인해 사회제도의 의도치 않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소득세제 또한 주로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예술인은 자영업자와 비슷하게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활동하여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근로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인의 복잡한 업무 형태는 이들이 소득세제를 적용받을 때 많은 이슈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부족하며 관련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예술 산업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규모의 확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단체나 기업, 관련 종사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술 산업의 성장은 더 많은 거래와 수입의 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세제도가 예술 분야의 활동에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술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인 소득세는 향후 예술시장이 성장할수록 제도의 구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예술시장이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도 더욱 복잡해지는 현 상황에서 현재 예술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세제도인 소득세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의 활동 특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넓게 쟁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소득세 관련 쟁점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소득세제와 관련한 인식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현재 소득세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제와 관련한 큰 원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일어난 해당 연도에 부과하고 소득의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입에서 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경비 인정 방식이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면세를 적용하는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예술인들의 비정형적인 업무 형태, 소득 주기, 낮은 임금수준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인의 업무 특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소득세제 적용 중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세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가운데 예술인들에게 적합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예술인과 예술시장에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전체를 기본으로 하되, 내용별 필요한 사례 조사를 위해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해외 국가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 대상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가 되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세 제도는 주로 ‘국세’의 소득세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방세에 포함된 소득세는 국세의 운영 원칙에 영향을 받아 계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세를 중심으로만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라.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그동안 소득세는 물론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고려해, 먼저 예술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조세제도 관련 논의

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세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예술인의 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해외의 예술인을 위한 소득세제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및 쟁점을 분석해 예술인들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현재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예술 분야의 소득세의 과세 원칙과 현황, 관련한 쟁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소득세 제도와 관련한 각종 정책연구 보고서 및 논문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예술인과 관련한 각종 조세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타 분야의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저서,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In-depth interview)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의 구성과 현황, 그리고 쟁점과 한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세정책, 회계 및 세무 등의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전문가 및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표 1-1〉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명단

회차	일시	자문위원
1	2023. 03. 10.	김성규 회계사(한미회계법인)
2	2023. 03. 17.	김상철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3	2023. 03. 21.	백복기 세무사(비케이비 세무소)
4	2023. 03. 27.	전병목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5	2023. 03. 31.	안종석 박사(가온조세정책연구소)

다. 사례조사(case study)

본 연구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해외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사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조사한 나라는 호주와 스페인, 아일랜드이다.

라. 예술계 종사자 FGI

본 연구는 해외 사례조사와 더불어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우리 소득세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쟁점에 대해 우리 예술계 종사자들의 인식과 현재 운영 현황, 그리고 관련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2023년 7월 12일(수)에 2차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표 1-2〉 예술계 종사자 FGI 인터뷰 명단

회차	일시	FGI 참여자
1	2023. 07. 12. 오전	김○○(영화/기획행정) 김○○(연극/창작) 박○○(국악/창작) 박○○(문학/창작) 장○○(음악/기술지원 및 기획)
2	2023. 07. 12. 오전	공○○(미술/창작) 김○○(영화/실연) 김○○(국악/기획행정) 박○○(연극/실연) 정○○(국악/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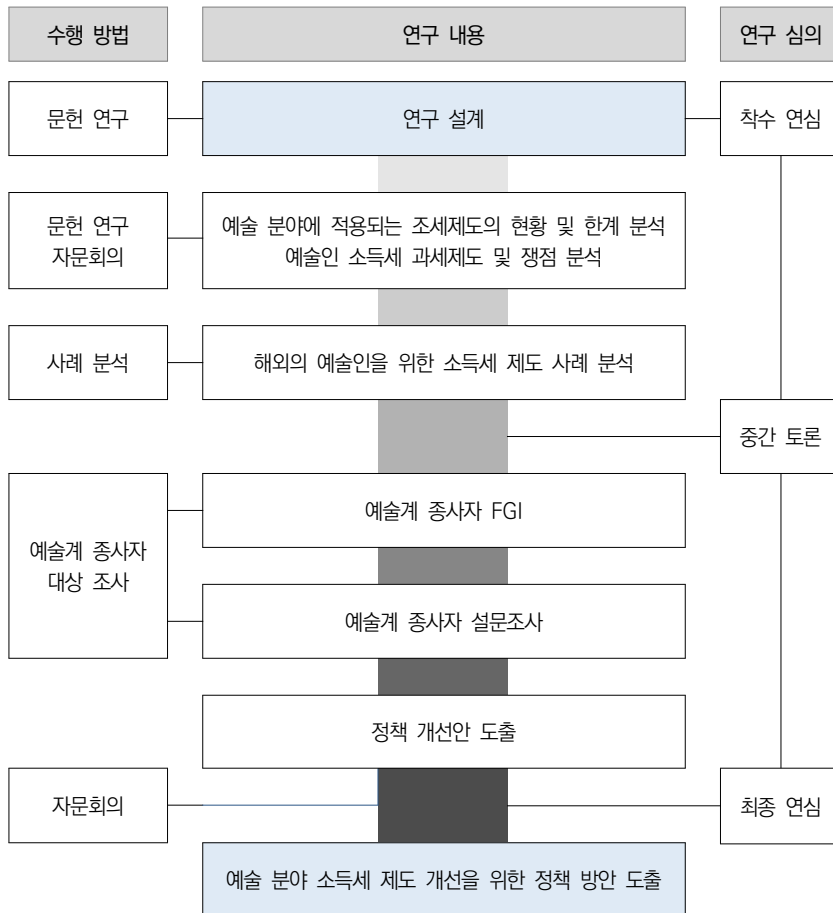
마. 설문조사(survey)

예술계 종사자 FGI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예술인들의 소득세 관련 다양한 쟁점과 관련한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

- 조사 대상: 예술계에 종사하는 현업 예술인 총 500명
- 조사 일자: 2023년 7월 19일(수) ~ 7월 31일(월) (총 13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4.4\%$ point
-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리퍼블릭
- 조사 내용: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종류 및 액수, 예술인들의 소득세 신고 관련 현황,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관련 애로 사항 및 수요 전반, 응답자 정보 등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제2장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와 쟁점

제1절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와 현황

1.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종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¹⁾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표 2-1>과 같이 과세 주체에 따라 주체가 국가(정부)인 경우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국세는 내용에 따라 다시 1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크게 구분되는데, 내국세는 세수(稅收)의 용도에 따라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나머지 조세를 아울러 ‘보통세’로 구분한다. 납부된 세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경우 ‘목적세’라고 한다.

보통세 중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된다. 또 조세부담자에게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 즉 조세부담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반면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경우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자로부터 세금을 가격에 포함시켜 받아 추후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예술 분야 또한 개인과 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직접세와 간접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예술 활동과 관련한 우리나라 주요 조세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kor/TaxFiscalPubInfo_TaxStructure1.do / 검색일자: 2023. 4. 9.)

〈표 2-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

구분				세목
국세(14개)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관세
지방세(11개)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1.1 예술 활동 관련 직접세

가. 소득세

예술 분야 역시 다른 모든 분야의 개인 및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활동에 있어 조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술 활동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는 개인 예술인의 경우 소득세, 단체나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직접세는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 즉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 또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한 대가에 적용되는 조

세제도로 예술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창작, 실연, 기술, 행정기획 등의 활동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개인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달리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방식, 즉 ‘열거주의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 즉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의 9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²⁾.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다. 나머지 소득세는 주로 개인의 투자나 저축 등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다³⁾.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하여 반복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⁴⁾. 일시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한 소득인 기타소득이 법에 해당 사례가 열거되어 있다. 반면, 사업소득의 범위는 아주 포괄적인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의해 얻어진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에서 정의한 1) 영리를 목적으로, 2)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3) 계속 반복성을 가진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예술인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수령하는 사례비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금전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며, 예술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되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하는 세금요율은 3.3%가 된다.

2)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포괄적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2022), 「2022년 조세개요」, p. 44)

3)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접속 일자: 2023. 4. 25.)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적용 범위는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등이 포함된다.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적이며 반복성'을 띠는지 등 앞서 언급한 사업소득의 정의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활동인지 여부이다.

2)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은 앞서 설명한 사업소득과 달리 '반복성이 없는 용역'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주로 종사하는 예술 활동이 아닌 어쩌다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물품을 대여해서 소득을 얻거나, 미술작품을 양도받았을 때의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원고료나 인세(印稅), 또는 미술, 음악, 사진 관련 창작품에 대한 대가 등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예술인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다⁵⁾.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 이때 필요경비는 예술인이 반복적이지 않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비나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의 60%로 보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시 말해, 사례비로 20만 원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면 전체 20만 원에서 20만 원×60%를 뺀 금액인 8만 원(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20만 원-(20만 원×60%)=8만 원). 8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인데(8만 원×20%=1만6천 원), 이를 전체 사례비 20만 원과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제공받은 금액의 총 8%가 원천징수세율이 된다(20만 원×8%=1만6천 원). 여기에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액의 10%가 지방세로 별도 부과되어, 최

5) 기타소득의 세액 계산: 기타소득금액 [전체 제공하는 금액 - 필요경비(전체 금액의 60%)]×20% = 기타소득의 세금

총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요율은 8.8%가 된다.

그러나 사례비가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기타 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분리과세⁶⁾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나,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된다.

3)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사업소득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된 구조 안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같은 명칭들이 사용되는데, 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단체에서 이른바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단원으로 일하는 경우나 각종 협회·단체, 기획사, 제작사 등 관련 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받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리랜서보다는 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 제공자가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한 거부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된다⁷⁾. 원천징수의무자⁸⁾는 근로자인 예술가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⁹⁾.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 분야의 특성상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특정 단체나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을 한 예술인의 경우로 한정된다. 비정규직으로 특정 기간에 한정해 계약을 맺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월정액의 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있는 예술인이 허락을 얻어 공연에 참여할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공연에서 받은 사례비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6)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7) 권민(2021), 「미술과 세금」, p. 39.

8)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인이 된다.

9)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된다.

4)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이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라면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월정액에 의해 받게 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행사나 프로젝트에 한정해 단발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통 이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이다.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일급에서 15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금액의 6%를 계산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본다¹⁰⁾.

위에서 살펴본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용역 제공 형태와 원천징수 방법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 <표 2-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2-2>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소득 구분	고용관계	용역 제공 형태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	없음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	수입 금액의 3%를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0.3% 별도)
기타소득	없음	일시적인 용역 제공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수입 금액의 8%를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별도. 수입금액의 0.8%)
근로소득	있음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과세표준에 따라 6%~45% 적용 소득액에 따라 세율 증가

나. 법인세

개인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많은 예술단체 또는 기업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예술 분야의 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

10) 일용근로소득 세액 계산: (일급-15만 원)×6%×(1-55%)=원천징수세액

자,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보유 단체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¹¹⁾ 그러나 모든 사업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예술 분야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상당수가 공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공 지원 기관에서 공공재원 신청 시 지원 신청자의 법적인 지위를 밝히게끔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법인과 임의단체의 비율이 그 뒤를 잇고 있다.¹²⁾ 이는 주로 제작에 필요한 실비 비용을 지원하는 많은 공공 지원 사업의 성격상 개인보다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용 처리에 용이하고 지원 기관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이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된다. 예술단체는 비영리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법인인 예술단체가 수익사업 외에 이러한 비수익사업(보조금사업, 기부금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¹³⁾

많은 예술 단체나 기업이 받는 국고 또는 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 수입은 국가(정부)가 재정적으로 원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금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처리 방식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다소 다른 상황에 놓이는데, 영리법인은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기에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수입 및 비용까지 포함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에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이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법

11)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okams.or.kr/04_exchange/report.aspx (접속 일자: 2023. 4. 26.)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13) 실제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총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조금 수입과 지출은 동일한 금액일 것이므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법인세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인세 금액에 영향은 없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이 될 경우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¹⁴⁾

1.2. 예술 활동 관련 간접세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용역)의 거래(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주체는 판매자(납세의무자)이지만,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비자(조세부담자)’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제도인데, 최종 판매자(사업자/납세의무자)는 소비자(조세부담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판매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금전을 지불하면 받게 되는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향후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14) 다만 법인세 감면이 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예술단체)에 적용되는 경우와 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와 면세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르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은 부가가치 면세의 대상이다. 예술 분야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은 당초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6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¹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중략)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6호에 의해, 동 법 시행령에서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26조제17호에 의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인 경우에도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¹⁶⁾ 면세가 되는 예술창작품에 대하여 좀

15) 실제로 2012년도에는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품은 해당 시행령 조항에 공연예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연물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강성모, 2012)

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아래의 시설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예술창작품이 면세가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26-43-2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으로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1.3. 예술 활동 관련 국제 조세조약

예술 활동에 대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며 거주자가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을 발생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¹⁷⁾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하에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술 활동에 대한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발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을 통해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17) 조세조약의 적용 기준은 내국인·외국인 개념이 아닌 국적에 관계없는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① 주소를 두거나, ②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조세조약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¹⁸⁾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97개국¹⁹⁾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체결한 국가별로 과세 및 면세 규정은 조금씩 상이하다.

하지만 대체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예능인(연예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항이며²⁰⁾, 예능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참고한다.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예능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조약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제18조)이나 근로소득(제19조), 사업소득(제8조) 규정을 적용한다.²¹⁾

여기서 예능인(연예인)의 범위는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컬 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되며, 체육인 역시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이 포함된다.²²⁾ OECD 모델협약 및 UN 모델협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예술 활동 혹은 연예인, 운동가로서 인적활동을 수행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이는 개인 및 단체·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따르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제외한다.²³⁾

18)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2). 해외공연의 국제조세 해설집

19) 2012년 78개국, 2015년 84개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 우리나라의 학계 및 실무에서는 예능인 및 운동가에 대한 조문을 연예인 및 체육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OECD 모델을 참고하면 예능인(artistes)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김정홍(2015).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조세학술논문집, 31(1).

21) 김정홍(2015).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조세학술논문집, 31(1).

22)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2). 해외공연의 국제조세 해설집

23)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2). 해외공연의 국제조세 해설집

2. 예술 분야의 조세제도 논의의 현황과 소득세 논의의 필요성

2.1. 예술 분야의 조세제도 논의의 현황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과 예술 분야의 영세성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다양한 조세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술 분야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조세제도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의 과세원칙을 따르되 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해 일부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었고 조세특례 적용을 추진해 온 조세제도는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예술 활동에 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조세제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창작물, 문화예술행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 등에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술 활동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에 대한 논의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 예술인과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는 소득세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으며, 주로 예술 소비자나 후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현재까지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어 오고, 적용되었던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예술 활동 관련 조세지원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비영리법인과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감면이 되는 세금은 주로 ‘법인세’와 관련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예술 분야를 위한 지원이기보다는 기존의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연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 분야의 활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들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수익사업 소득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세 지원은 소득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예술 분야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지원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현재 1,592개(2023. 4.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예술의 전당과,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고시한 6개 공공립 예술단체²⁴⁾에 한정하여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 6개 공공립단체는 이미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상당액 지원받고 있어서,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예술단체·법인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 단체·법인 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함께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술 활동과 관련한 조세지원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예술 분야 공급 부문 관련 조세지원 내역

적용 대상	관련 세법	내용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문화예술 관련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관세법」	• 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 박물관, 미술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 예술가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도시 내 법인 문화예술기업의 지방세 3배 중과세 배제
		•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 공연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자영 예술가 제외)

24) 6개 단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적용 대상	관련 세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출처: 정현일 등(2007)과 김노창·배형남(2014)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정리함.

나. 예술 소비자 또는 후원자 관련 조세지원

예술 분야에서의 공급, 즉 예술 법인의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이외에도, 예술 분야를 소비하거나 지원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조세지원은 이와 같은 사용자와 관련한 것인데, 소비자 지원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예술에 대한 구매나 지원을 활성화하여 간접적으로 예술 활동 주체, 그리고 예술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아래 <표 2-4>에 따르면 예술 분야 사용자의 소비 또는 지원 활동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 단체(세제적격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을 통한 재화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서화나 골동품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인정은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사용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접대비, 그리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관련한 세제 혜택 적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예술 분야 사용자 관련 조세지원 내역

적용 대상	관련 세법	내용
개인	「소득세법」	• 문화예술단체 지정기부금의 일정 한도액 필요경비 산입, 세액공제
법인	「법인세법」	• 문화예술단체 지정기부금의 일정 한도액 손금 인정
상품	「부가가치세법」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에 입장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개인	「소득세법」	•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비과세
법인	「법인세법」	•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인정

출처: 정현일 등(2007)과 김노창·배형남(2014)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정리함.

1)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개인 소비자가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경우 소비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예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 소비 행위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 세금 납부 시 공제 혜택을 주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소비행위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생산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① 제도 개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도서, 공연 티켓, 영화 티켓, 입장권(박물관·미술관·영화관)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²⁵⁾ 이러한 문화비에 소비할 경우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²⁶⁾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에만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2018년에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에 이어 2023년 7월 영화 티켓까지 포함되면서, 일반 국민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25)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6)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 100만 원으로 나뉘져 있었으나 2023년부터 통합하여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어 소비자와 생산자(공급자)를 모두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목표로 하였다.²⁷⁾ 예를 들어,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50만 원어치 구입하고, 도서를 50만 원어치 구입하여 100만 원을 문화비로 사용하였다면 그중 30% (공제율)에 해당하는 30만 원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적용대상은 도서의 경우 중고책²⁸⁾이나 전자책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공연의 경우 온라인 구매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실황²⁹⁾ 공연 역시 가능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할 때 내는 입장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 인터넷 신문이 아닌 종이신문과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 비용이 아닌 상설영화관의 입장권(티켓)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② 제도 성과 및 한계점

개인이 소비하는 문화 분야의 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한 등(2022)의 연구 결과³⁰⁾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 문화비를 지출하는 국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³¹⁾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2017년도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 이용 실적이 0인 가구는 전체 분석 대상 가구의 84.1%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52.0%로 감소하여 제도 시행 후 약 30%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보면 2019년 기준 문화비 지출 가구는 비교 가구 대비 문화비 소득공제 실질지출이 제도 시행 이전인 2017년에 비해 54,177원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³²⁾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³³⁾

2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8) 개인 사이의 중고책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공연 녹화 중계 또는 MD 상품은 적용받지 않는다.

30) 이종한, 박순찬, 최종일, 임현철(202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보원.

31) 2022년 신용카드(신한카드) 4개년(2016년~2019년) 이용 실적을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자 그룹과 비교그룹 간 지출 차이를 분석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32) 위의 글, p.86.

33) 1분위 소득구간에서는 수혜그룹이 비교그룹에 비해 0.364%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기 때문에 0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2분위 구간에서는 0.775%, 3분위 구간에서는 0.948%, 4분위 구간에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0인 지출을 제외한 문화비 지출 선호 그룹에게는 상당한 증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³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 이용금액 2조 6천억원에 적용하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매출 증가 규모는 약 256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서적 매출(2019년 8조 4,488억 원)에 적용하면 약 844억 원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⁵⁾

실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용자와 사용자(국민)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대부분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사업자)와 사용자(국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그러나 국민의 문화예술 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과 전체 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적용 범위와 혜택은 실제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피하고 있는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³⁷⁾.

또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6만 3,024원)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할 시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1만 8,907원 수준으로 2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사용 금액에 대한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여³⁸⁾ 실제 중 저소득

는 1.45%, 그리고 5분위 구간에서는 1.046% 더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종한, 박순찬, 최종일, 임현철(2022), 위의 글, p. 93).

34) 위의 글, p.93.

35) 위의 글, p.95.

36) 한국문화정보원이 2020년에 실시한 '문화비 소득공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90.6%, 사업자의 92.1%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확대 적용 희망 분야는 영화, 문화상품 구입, 여행 숙박의 순으로 나타났다.

37) 568만 명의 자영업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를 채우기 위해 연간 330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지출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생색내기엔 그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한겨레, 2018. 6. 18.)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51141.html>

층의 문화예술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³⁹⁾

이종한 등(2022)의 연구에서도 도서·공연의 경우 2017년과 2019년 패널데이터의 분석대상자의 61%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문화비 0 지출 가구 비율이 높은 편임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 전후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개인의 문화지출 선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을 소비하던 집단의 지출의 소비를 늘리는 데에만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⁴⁰⁾ 같은 연구에서, 문화비 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소득이 소득공제 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공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이 열등재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이종한 등, 2022)

이와 같이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금액이 없는 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제 문화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¹⁾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상영관 입장권(티켓)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 이용 금액이 0원이었던 지출 가구 추이와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 규모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와 국정감사(2021년) 당시의 지적, 그리고 추후에 진행된 관련 연구(이종한 등, 2022)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문화 분야 소비 활성화의 어느 방향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예술인의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유추해 보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예술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으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매출액에 따라 추가 소득을 제공받지 않고 일시적인 계약을

38) 서울시의 평균 사용금액(9만 3,468원)이 전라남도(3만 4,094원)의 3배 수준이다.

39) [2021 국감] ‘문화비 소득공제’ 효과 ‘짙팜’ 국민 평균 2만 원도 못 받았다., 뉴스핌 보도자료, 2021.

10. 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001000375>

40) 위의 글, p. 105.

41) 위의 글, pp. 104-105.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 예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자체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예술인의 활동 기회 증대는 지속적인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예술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는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파급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접대비

① 제도 개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⁴²⁾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⁴³⁾ 접대비는 기업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현행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기업 규모나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설정하고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고 있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문화접대비 역시 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 분야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켜 예술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접대비 외에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추가로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업종별 관행이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기본한도 금액에 매출액에 수입금액대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42)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통상적 업무 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산입)

일반접대비 손금한도액

[일반접대비 손금한도액] = ① + ②

① 일반접대비 = ㉠ + ㉡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0,000원 × 해당 사업 연도의 개월 수 / 12

(중소기업) 36,000,000원 × 해당 사업 연도의 개월 수 / 12

㉡ 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② 문화접대비 한도 = Min(㉠, ㉡)

㉠ 문화접대비 지출액

㉡ 일반접대비 한도(위 ①) × 20%

* 출처: 이성구(2022), 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조세연구, 22(4), pp. 57-77.

이 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내국인이나 내국법인⁴⁴⁾의 국내 문화 관련 지출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산설 2007. 8. 6.,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9. 2. 12., 2019. 12. 31., 2020. 5. 2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4)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뜻하고,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정의)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이나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강연료 등에 대하여 지출한 경우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22년 말로 적용 기한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3년이 늘어나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문화접대비는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관람 티켓 구매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있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경우에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도 성과 및 한계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통한 품격 있고 건전한 접대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은 2007년 제도의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고객 만족도 향상, 기업 임직원들의 조직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평판 제고, 그리고 간접적인 문화예술 분야 수요 창출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기업의 접대비 신고금액과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접대비 지출액 제한이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문화접대비 신고액의 확연한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후 2019년도에 121억 원까지 신고액은 늘어났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는 31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2-5> 참고)

〈표 2-5〉 연도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및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단위: 억 원, %)

신고 연도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	접대비 신고 금액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2009년	43	74,790	0.057%
2010년	44	76,658	0.057%
2011년	49	83,535	0.059%
2012년	45	87,701	0.051%
2013년	45	90,068	0.050%
2014년	48	93,368	0.051%

신고 연도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	접대비 신고 금액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2015년	90	99,685	0.090%
2016년	75	108,952	0.069%
2017년	94	106,501	0.088%
2018년	89	107,065	0.083%
2019년	121	111,641	0.108%
2020년	105	117,469	0.089%
2021년	31	113,740	0.027%
연평균 증가율 (2009년~2021년)	△2.69%	3.56%	-
연평균 증가율 (2009년~2019년)	10.90%	4.09%	-

자료: 국세청 법인세과 문화접대비 신고 내역 정보공개 자료

*한미회계법인(2022),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자료에 2021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산출함.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56%가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56%)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⁴⁵⁾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접대비 제도 인지 여부 조사’(2017년) 결과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193개(38.6%)로 2016년 19.5% 대비 1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 가운데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기업은 72개(37.3%)로 지난 2016년 19.5% 대비 17.8% 증가했다.

문화접대비 신고 기업이 늘어나며 문화접대비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고객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조사에서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58.3%,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중복 응답 허용)

그러나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시작된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실제 활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해 보인다.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시기(2020년~2021년)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특히 2021년의 경

45) 기업들 ‘접대비’ 1억 중 ‘문화 접대비’는 단 5만 원, 머니투데이, 2014. 10. 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10091351764035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우 2019년 대비 0.081%p 하락하고 신고금액 역시 2년 전 대비 90억 원이 줄어들었다.(<표 2-5> 참고)

무엇보다도 전체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낮다. 2021년 실시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보면,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큰 이유로 기업들은 고객이 문화접대를 원하지 않고 문화접대의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⁴⁶⁾ 또한 2019년까지 접대비 증가율보다 높았던 문화접대비 증가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낮아졌는데, 기존 문화접대비 지출처가 공연이나 영화 관람 등에 치우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다중 밀집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사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접대비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접대비 신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신고율 자체가 낮은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 초기에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율이 적었다. 게다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총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아 세제상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문화접대비 지출이 많지 않았다.

낮은 문화접대비 신고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화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계정 과목 내에 문화접대비 세목 계정을 만들지 않고 일반 접대비, 홍보 마케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접대비 지출액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렵고 결국 국세 통계에서 누락되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⁴⁷⁾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 등에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결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기업 이미지 향상 및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신고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제도 시행 효과가 급격하고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접대비 제도는 인식 개선 및 신고 증진이란 주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해결된다 해도 문화접대비 제도의 세제 혜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세제

46) 한미회계법인(2021),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한국메세나협회. p.57.

47)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접대비 활용 Tip-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pp. 19-20.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화 분야의 소비 진작을 통해 결국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술인들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① 제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문화예술후원 관련 세제 감면은 교육, 복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데다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이끌어 내기엔 미미한 수준이며 기부금품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은 오히려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문화예술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 영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확대하도록 정부제도 마련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후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로 하여금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법제화하고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연계하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제도 마련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집행과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문(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후원 확대를 위한 매개단체의 활동 필요성과 인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문화예술후원자(기업, 공공기관) 중 모범적인 기관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전체 15개 조항 중 10개 조항이 이와 관련한 조항으로 법률의 초점이 2개 유형의 단체·기관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표 2-6> 참고)

〈표 2-6〉 「문화예술후원법」의 조문별 주요 내용

조문 번호	조문명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법률 제정의 목적
제2조	정의	• 용어(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자,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에 대한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시책 마련과 후원 권장·보호·육성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가능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문화예술후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 법률의 우선적 적용
제5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요건 및 인증에 대한 정부의 업무 설명
제6조	정관 등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 설명
제7조	인증의 취소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에 대한 인증 취소
제8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지원 가능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
제9조	조세의 감면	•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가능
제10조	보고 및 서류제출	• 중앙정부에 대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업무·회계·재산 보고
제11조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한 포상
제12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정부의 업무 설명
제13조	인증의 취소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명시된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관 가능 • 인증 업무 등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제15조	과태료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 법률의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

② 제도 성과 및 한계점

2014년 제정된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⁴⁸⁾,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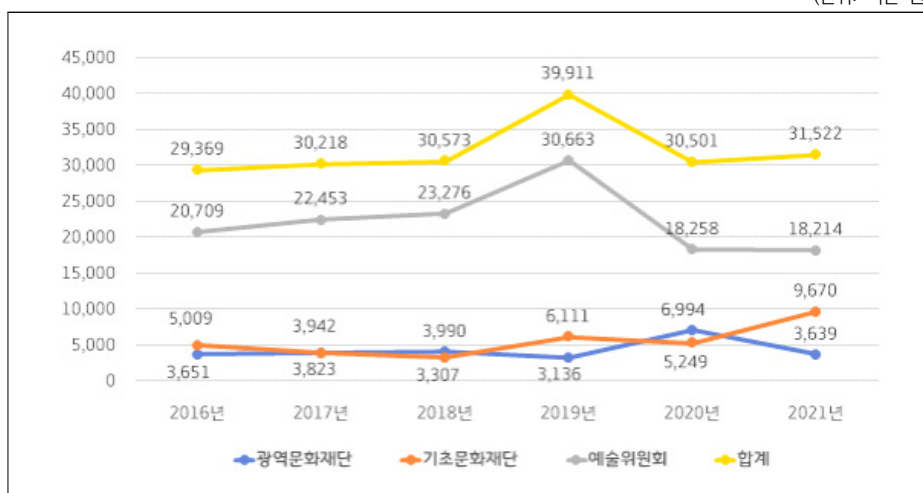
법 제정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지역문화재단은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서 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민간 재원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이들 기관에 유입되는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

48) 「문화예술후원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⁴⁹⁾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에 다시 일정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의 추이를 기대하게 한다. ([그림 2-1] 참고)

[그림 2-1]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 추이(2016년~2021년)

(단위: 백만 원)



* 국세청 홈택스의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 개별 재단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재정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한국메세나협회가 매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⁰⁾ 2012년 초반까지 1,600억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문화예술후원법」 제정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전인 2019년도에 2,081억 원까지 늘어나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행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2022년의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모습을 되찾았다.(<표 2-7> 참고)

49)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년)에는 다시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금 역시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50) 설문에 응답한 기업이 밝힌 문화예술 지원현황과 문예위의 기업 기부액을 합산하고 중복을 걸어낸 후 산출한다.

〈표 2-7〉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2017년~2022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지원 건수	1,415	1,337	1,431	953	1,051	1,318	7,505	△1.4%
금액	194,312	203,954	208,144	177,849	179,054	207,344	1,170,657	1.3%

자료: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한국메세나협회)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한국메세나협회의 자료와 달리 직접 문화예술단체 중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 실적 역시 「문화예술후원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민간 재원의 규모가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은 시기(2020년~2021년)를 제외한다면 기업의 기부가 10.2% 정도 늘어나, 앞선 한국메세나협회의 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표 2-8〉참고)

〈표 2-8〉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수입 현황(2017년~2021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개인	11,763	10,980	9,636	11,504	1,182	12,747	57,812	1.6%
기업	31,227	32,904	39,709	41,758	4,319	26,885	176,802	△2.9%
합계	42,990	43,884	49,345	53,262	5,501	39,632	234,614	△1.6%

자료: 연도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예술경영지원센터) 중 기부금 현황을 연구진이 정리

2014년 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시책 마련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 시기(2014년)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 〈표 2-9〉는 「문화예술후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현황인데,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관련 조례는 전체 자치단체 수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분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6. 1.
2	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4.
3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11. 13.
4	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1.
5	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12. 16.
6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019. 8. 9.
7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16. 7. 11.
8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 28.
9	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7. 14.
10	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20. 10. 5.
11	기초	부천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2.
12	기초	성남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4.
13	기초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21. 5. 13.
14	기초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21. 9.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검색일: 2023. 07. 15.)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데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중 비교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과 맞물려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고 실질적인 후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후원법」 제정 이후 기부금 관련 특례를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법 개정이라는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문화예술후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10%), 문화·예술 활용과 관련된 교육 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0%, 중소기업 20%)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이후에도 입법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으나 아직까지 본회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⁵¹⁾ 2014년 「문화예술후원법」 제정 당시 「조세특례제한

51)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에 더해 기업 매출액의 0.05%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액 감소는 1년간 4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조세 정책 효과(예술기부금 및 예술소비 872억 원 순증), 실업 및 고용 효과(1,760명~2,081인 고용 창출), 정부재정 대체 효과(672억 원) 등이 예상되었으며,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⁵²⁾ 향후 세수 감소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후원법」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원 매개단체와 후원 우수기관 인증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인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간접적이긴 하나 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재정의 총량이 늘어나 예술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 예술인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가 요구되는 제도이다.

다. 그 외 논의 중인 예술 분야 조세지원

1) 공연 분야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자(소비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자(최종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와 별도로 가격에 포함시켜 추후 신고·납부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취지는 최종소비자가 자신이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세(累進稅) 성격이 있는 직접세와 달리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의료, 생활필수품, 또는 공익 목적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소비자(조세부담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만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입장권 발매가 가능하여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52) '메세나법' 제정,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원한다, 웰페어뉴스, 2014. 02. 06.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85>.

① 공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연은 해당 공연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창작품이거나 발표회, 연구회, 전시회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의 범위를 행사 주최의 성격을 불문하고 '비영리'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 비영리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익금을 배당·분배 하지 않거나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공식 후원, 협찬하거나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 또는 부족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이 비영리라고 규정되고 있다.⁵³⁾

문제는 예술 분야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인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예술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어디까지 비영리 예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통칙에 열거된 사례를 참고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공연예술계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이슈는 공연 입장권(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즉 해당 공연을 면세사업으로 간주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클래식 음악이나 연극, 무용, 오페라 공연 중 비영리 공연은 대부분 면세로 진행되고 있고 뮤지컬이나 대형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경우 실제로는 수익이 남지 않거나 거의 없고 부가가치세가 티켓 가격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어 관객 수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공연은 어린이 대상 공연이나 대형 뮤지컬의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논의에 앞서 일반적인 공연의 매입 및 매출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표 2-10>과 같다.

5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표 2-10〉 공연의 매입 및 매출 요소

매입	매출
대관료	입장권(티켓) 수입
무대 제작비	협찬
출연료	보조금
홍보비	기부금
기타	기타

매입의 경우 공연 주최자(기획사 등)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이고, 매출은 외부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주최자로 유입되는 금전이다. 영세한 공연사업자의 경우 매입이 수입, 특히 티켓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형기획사의 경우 매입보다 티켓 수입이 대체로 많다. 공연을 올리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무대 제작비나 출연료, 대관료 등은 고정적이나 장부상 매출로 표현되는 티켓 수입이나 보조금, 기부금 등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공연을 올리는 대형기획사의 티켓 수입을 통한 매출이 크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면제와 예술 단체의 수익 변화

일반적인 공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공연 티켓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에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는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티켓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최종소비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격 하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만큼 티켓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순수예술 활동을 하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티켓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모든 공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된다면 순수예술 사업자는 진짜 소비자 대신 최종 소비자로 간주되어 자신들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단계에서 누적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지 못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최종 소비자인 관객이 공연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연사업자는 그 전 단계인 무대 제작비, 대관료 등을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

가가치세가 누적되어 최종 소비자인 관객이 지불하는 티켓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본인들이 계산한 교환가치(티켓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만큼 빠지게 되어 당초 기대한 수익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전(티켓 가격을 낮추기 전)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가 반응되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일부 대형기획사나 상업적 공연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가격의 변화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술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결국 조세부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중간자 위치에 있는 공연자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순수예술 활동을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일반적인 예술단체의 수익을 높여 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2.2. 예술 분야의 조세제도 논의의 한계와 소득세 논의의 필요성

가. 간접 조세특례의 한계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관심 부족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조세제도는 주로 예술 활동 그 자체와 관련된 것보다는 문화예술향유 증진(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접대비)이나 후원 활성화(문화예술후원자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 분야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조세특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보다는 소비자나 후원자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 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문화예술 활동 그 자체와 관련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6호는 국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예술단체 6개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문화비를 사용했을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문화접대비 또한 우리나라 문화상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며, 문화예술후원도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과 맞물려 활성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던 이러한 조세특례 제도는 아직 예술 분야 활성화와 예술인의 활동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이며, 소비자나 후원자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를 통한 예술 분야에 대한 간접지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조세제도들이 검토되었지만, 정작 예술인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예술 활동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에 대한 논의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고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예술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인 예술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나 사업은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제는 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제는 그동안 예술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세제와 관련해 예술인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거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술 분야에서 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정부가 세입을 어느 정도 포기함으로써 보조하는 행위를 세제(조세) 지원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소득 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집단 또는 개인들의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실제 적지 않은 예술인은 최소 수준의 과세표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년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예술 활동 수입은 평균 695만 원에 불과하다.⁵⁴⁾ 이 중 건축(4,442만 원), 방송연예(2,690만 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전체 평균수입은 더 낮을 것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체감할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반해 적지 않은 금액

54)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p. 30.

이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이 개인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체감할 수준의 편익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관련 데이터의 부족이 예술 활동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세액공제 등 직접세에 대한 감면 등 세제 혜택 논의를 위해서는 예술인의 수입 수준과 형태, 업무상 소요되는 경비의 종류와 수준, 필요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연구의 미흡으로 예술 분야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어려웠다. 금전적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분야의 특성도 실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에서 부딪히는 세제상 이슈가 커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예술인의 직업 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소득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그러나 최근 예술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직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며 다양한 업종 및 직업군이 탄생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근로자’로 종합할 수 있었던 근무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 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예술인의 경우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대표적으로 독특한 형태의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직업군들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안된 사회의 각종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4대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상당 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대부분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형태가 현재와 같이 복잡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러한 근로자 중심의 제도 설계가 유효했지만,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예술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형태의 직업군도 포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예술인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며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

조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세제도 또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일반적인 직업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제도를 통해 프리랜서 등과 같은 형태의 직업군을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프리랜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우리 예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된 조세제도에 있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불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술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자와 달리 의료비, 교육비, 월세, 대출금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예술인의 문제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는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준비 기간이 길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소득변동성이 매우 큰 예술인 및 체육인의 경우 세금 부과에 있어 누진세율로 인해 일반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의 경비율 인정과 관련해서도 예술 분야 내에서도 업종 간에 인정률이 매우 들쭉날쭉해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우리 예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업무의 분업화 및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점차 해외시장으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아직은 산업 초기화 단계이지만 빠르게 산업적 고도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의 수입도 점차 증가함은 물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예술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예술 활동의 범위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그 자체와 관련한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예술인 지원정책의 관점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예술인들의 소득세와 관련한 제도의 구성과 예술 분야 적용에 있어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2절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적용 현황과 쟁점

1.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적용 현황

1.1. 과세원칙과 예술인 소득에의 적용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즉 소득세 제도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여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수입금액’이라고 하는데, 예술가의 경우 예술 작품을 판매한 대가 또는 예술 공연 등 예술 행위를 수행한 데 따른 대가(인적용역)가 수입금액이 된다. 개인 또는 법인이 수취한 이자, 배당,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급여 등)나 사례금 등도 모두 수입금액이 된다. 수입금액 중 성격에 따라 세법에 일부 비과세로 규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수입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개인이 수취한 사업소득 중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고, 그 외 농림어업 분야에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다. 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다⁵⁵⁾. 법인이 수취한 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법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그러나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 공제한 이후 실제 과세대상 금액이 결정된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산출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필요경비는 수입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인건비, 상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한 비용, 이자 등 자본조

55) 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참고

달 비용, 기계·설비 구입 비용, 사업장 임대 및 유지 비용 등 사업상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 포함된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이 수입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배우의 의상 경비, 미술 재료비, 악기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실제 지급한 경비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접대비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된다.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면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 2-11〉 소득세의 세액 결정 과정

소득금액	=	과세대상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필요경비 외)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또한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률로 정하여 특별히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중과세 방지, 근로자 등 납세자 지원, 중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활용된다. 과세를 할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법률에 규정된 ‘소득공제’를 차감한 액수를 산출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모든 소득세는 이 과세표준, 즉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산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표 3-1〉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으나, 실제 계산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구간별로 구간 하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구간 하한까지의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체계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에, 2,000만 원이 포함된 구간 하한인 1,400만 원까지는 앞 단계 세율인 6%가 적용되고, 그 하한을 초과하는 부분 600만 원(=2,000-1,400만 원)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데,

10억 원까지는 이전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술인들의 경우 수입이 해마다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은데, 작품을 창작하고 준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준비 기간이 길고, 이러한 긴 준비 기간을 거쳐 작품을 생산하고 발표했을 때 비로소 수입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수입으로 고정적이거나 정규적이지 않고, 일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 수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입의 금액 수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 사람이 이전에 수입이 없었던 것은 상관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예술인과 같이 오랜 기간의 준비 기간 동안 수입이 많지 않다가, 작품 발표 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표 2-12〉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

구간 하한	구간 상한	초과분 세율
	1,400만 원	6%
1,400만 원	5,000만 원	15%
5,000만 원	8,800만 원	24%
8,800만 원	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 원	3억 원	38%
3억 원	5억 원	40%
5억 원	10억 원	42%
10억 원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신출세액에서 법률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이 세액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된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적용하는데, 법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공된다. 개인의 경우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 과세의 기본원칙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소득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

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정방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허용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세율 체계도 다르다. 두 명 이상의 예술인이 결합하여 법인을 형성하고, 법인을 통해 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을 통해 예술 활동을 수행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개인에게 배분하면 개인에게 배분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사례금, 그 외 비용을 공제한 법인이익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활동이 예술 활동이건 순수한 상업 활동이건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며, 필요경비 산정방식, 소득 및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예술인이 개인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

예술인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체, 단체 등에 고용되어 고용주가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예술인이 법인 등 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근로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근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월 단위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라고 칭한다.

나. 사업소득

예술인 활동의 수입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 그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17호 및 제18호에 예술인 소득이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7호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예술인,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단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예술인이 개인 단위로 예술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소득은 제18호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개인사업체를 형성하고 다른 개인을 고용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7호가 적용되고, 예술인이 독립된 개인(프리랜서)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제18호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주자가 어떤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공연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세법상 그 활동은 개인 서비스의 제공이 되며, 그 활동의 대가로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이 된다. 그 활동을 한 예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형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호가 적용되거나 제18호가 적용되거나 모두 사업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정 개인에게 제17호의 소득과 제18호의 소득이 모두 있으면 그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제17호와 제18호는 필요경비 산정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다. 기타소득

예술인 활동의 대가가 소득의 또 다른 범주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제19호에는 인적용역 사업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예술인 활동은 라 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영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영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역
- 라. 그 밖에 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역

이 항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인적용역’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인적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정의를 차용하여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동 조에 열거된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열거된 각 호 중 제1호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술인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하면 인적용역은 ① 독립된 자격으로,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③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예술인이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설명이 필요한 두 번째 용어는 ‘일시적’이다. 기타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일시적과 유사한 용어로 ‘우발적’이, 반대되는 용어로 ‘계속적’, ‘반복적’이 사용된다. 같은 성격의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이 된다. 세법은 일시적·우발적 활동과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양자를 구분해야 하며, 다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술인의 활동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우발적인 상황에 부합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한편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급자에게 동일한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때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서 차이가 있다.

1.2. 소득 형태에 따른 예술인 과세 구조의 차이

앞서 예술인이 개인으로서 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세법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세목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세목으로서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앞의 <표 3-2>에 정리된 바와 같은 초과누진세율체제로 되어 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원천징수 등 과세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 형태별 적용세율과 과세 절차

과세 절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고용 관계를 근거로 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최종적인 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같다⁵⁶⁾.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세율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수행하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취득한 경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한다.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한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액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에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율을 보면,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⁵⁷⁾. 이 때문에 총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3%이다. 이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수취한 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개인으로서 사업소득을 수취한 자가 세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소득이 적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최종적인 세금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3.3%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미신고 사업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결정세액이 지급액의 3.3%에 미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술인들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도 지급액을 근거로 원천징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사업소득과 다른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예술인 활동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이다.⁵⁸⁾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40%이고, 소

56)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57)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44조 제1항, 제87조 제1의2항,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참조

58) 「소득세법」 제29조,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참조

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이 20%이므로, 수입금액 대비 원천징수세율은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의 8%(=0.4×0.2)가 된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를 사업소득의 3.3%와 비교해 보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13〉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	고용에 따른 용역 공급	비고용, 계속적·반복적 용역 공급	비고용, 일시적·우발적 용역 공급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신고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기본세율 적용	수입금액의 3.3% ¹⁾	수입금액의 8.8% ^{1) 2)}

주: 1) 지방세 포함

2)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0.2%(지방세 포함)

자료: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법」

수입이 정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자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타소득이 부분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의 40%)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수입이 750만 원 미만(기타소득금액 3백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되고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과세는 연 기타수입이 750만 원 이하인 예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수입금액 750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에는 300만 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타소득이 합산된다⁵⁹⁾. 따라서 예술인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예술 활동 수입은 연 750만 원까지로 초저소득 예술인만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를 초과하므로 기타소득이 크게 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과세 절차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

59)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만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의 40%)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3%(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2.0%(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액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면 8.8%가 되어 사업소득에 비해 원천징수세율이 상당히 높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환급되고,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술 활동 관련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는 소득 종류별로 비과세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근로소득이 비과세 항목이 가장 많은데, 그중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종업원 식대로 월 20만 원, 시내 교통비를 받지 않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이 비과세 된다. 그 외에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금액도 비과세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농업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으나 예술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은 없다. 기타소득은 예술인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과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술인이 가장 많이 제공하게 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인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다. 소득 형태별 필요경비의 적용

1) 경비율 적용의 원칙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경비율이 60%로 일괄 적용된다. 즉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만 소득금액이 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필요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고 있는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실제 지급한 경비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많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해당되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얻은 개인이 직접 장부를 기장하고,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데 적용하는 비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표 2-14〉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시	$\begin{aligned}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 \text{수입금액} \times (1 - \text{단순경비율}) \end{aligned}$
기준경비율 적용 시	$\begin{aligned}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 주요경비} &= \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end{aligned}$

①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은 주로 직접 장부를 기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수입 규모가 작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을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필요경비의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데에 유리한 점이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15〉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에 한함) → 개인예술인에 해당(업종분류번호 94)	3천6백만 원 미만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개인사업자에 해당(업종분류번호 92)	2천4백만 원 미만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표 3-5>에 나타난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을 산정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른데, ‘다’ 목에 포함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업종분류번호 92로 시작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된다. 세분해서 보면, 공연기획업, 무용 및 음악단체, 연극단체,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연단체로 구분된다. 업종분류번호 92로 시작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개인의 인적용역이 아니라 ‘단체’로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개인 예술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을 시작한 해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예술 활동이라는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는 ‘나’ 목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에 한함)’에 해당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목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적용역은 앞에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법」의 인적용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즉, 인적용역은 ① 독립된 자격으로,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③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개인 인적용역은 2022년까지 ‘다’ 목에 포함되어 2천4백만 원의 기준 금액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부터 3천6백만 원의 기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국세청의 업종분류번호 94로 시작되는 업종이며, 그중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배우·탤런트 등, 모델, 가수, 성악가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가, 연예보조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경비율 인정에 있어 ‘나’ 목에 해당하는 개인 예술인이 ‘다’ 목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있어 개인 예술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2천4백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 예술인은 그보다 높은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정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개인 예술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기준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앞서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뺀 금액에,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더 차감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여기서 주요 경비란 원재료 등을 매입한 비용과 사업장을 임차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합계한 금액이다.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로 지출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표 3-5>의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를 규정하는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인적용역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기장하여야 한다. 복식부기 기장 의무가 없는 자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현금 수입과 지출을 단순한 방식으로 정리한 간편장부를 기장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적용이 달라진다.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데, 이는 사업체가 지출을 과도하게 신고하여 소득을 줄여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개인 예술인과 개인사업자의 경비율 인정의 차이

예술인 및 예술 활동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업종코드 92로 시작하는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시 말해 예술 분야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최저 83.5%에서 최고 94.3%로 상당히 높다. 총수입 금액

중 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 등은 기준경비율의 경우도 비교적 경비율 인정 비율이 높은 편이다. 주요 경비로 예술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도, 23.7~25.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예술인의 경우 단순경비율도, 기준경비율도 비교적 인정 범위가 낮다.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단독으로 활동하는 개인 예술인에 해당하는데,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배우 등, 모델, 가수, 성악가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연예보조서비스 제공자로 구분된다.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 두 가지로 규정된다. 앞서 <표 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의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이 3천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4천만 원'을 기점으로 적용이 다르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4천5백만 원이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 초과분인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다.

개인 예술인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보면 기본율이 최저 22.3%(가수)에서 최고 70.9%(연예보조서비스)로 업종 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 가수 외에도 배우 등의 기본율이 2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연예보조서비스 외에 화가 및 관련 예술가(69.5%),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64.1%), 작가(58.7%)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율이 적용되며, 작곡가(49.7%), 모델(45.9%), 성악가 등(53.1%)에는 중간 수준의 기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예술인 외에 다른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보면, 꽃꽂이 및 요리 교사(업종코드 940901)에 적용되는 경비율이 81.8%로 가장 높고, 직업 운동가(940904)에 적용되는 경비율이 54.5%로 가장 낮다⁶⁰⁾.

60) 국세청,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_6호, 2023. 3. 29.

〈표 2-16〉 2022년 귀속 경비율 - 예술인 및 예술 활동

(단위: %)

업종 분류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업종 코드	중분류	세세 분류	기본율	초과율	
921401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업	85.0		24.5
921402		무용 및 음악 단체	94.3		24.5
921403		극단	96.7		23.7
921405		공연 및 제작 대리	83.5		25.2
921406		기타 창작 및 예술 서비스	83.5		25.2
921407		기타 공연단체	94.3		24.0
940100	인적용역	작가	58.7	42.2	14.0
940200		화가 및 관련 예술가	69.5	57.3	16.0
940301		작곡가	49.7	29.6	11.6
940302		배우 등	29.0	10.4	10.4
940303		모델	45.9	24.3	10.2
940304		가수	22.3	6.9	6.9
940305		성악가 등	53.1	34.3	17.6
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5.1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20.3

자료: 국세청,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_6호, 2023. 3. 29.

당해 연도 수입금액 중 4천만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초과율은 기본율에 비해 업종별로 10~20% 포인트 정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 기준경비율은 최저 6.9%(가수)에서 최고 20.3%(연예보조서비스)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단순경비율이 낮은 배우 등과 가수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초과율과 기준경비율이 같다. 이는 이들 업종에서 주요 경비에 해당 하는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한다. 국세청에서 최대한 실제 경비에 근접하는 경비율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경비율을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에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필요경비의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지급된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산정 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총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며, 그 금액 이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급

여액의 70%를 공제하고, 초과하면 초과분의 40%, 총급여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5%, 총급여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총급여액의 2%를 공제한다.

〈표 2-17〉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앞서 〈표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그 세액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소득에 따라 제각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외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많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 공제항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로는 노란우산공제와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주들의 연금 또는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이다.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데 개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이다.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자, 즉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액은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2.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문제점

2.1. 누진세율체계에서 더 세부담이 높은 프리랜서 예술인

앞서 <표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입의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해당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술인의 소득이 해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술인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걸쳐 작품을 생산하고 발표하면 비로소 수입이 발생한다.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수입은 이 결과물로서 발생한다. 작품을 발표해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그 수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해당 수입에 대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입의 금액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그 사람이 이전에 수입이 한동안 없었던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해당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연 소득 1천만 원이었던 예술가가 오랜 기간 준비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2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면, 지난 3년간은 세율이 6%였지만 해당 연도에는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2년간 수입이 매우 적고 향후에도 당분간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는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상 소득의 변동성이 크면 세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수준의 연봉으로 30년을 일하는 자와 그 30년간의 연봉 총액을 3년에 벌어들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수입이 없는 자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세부담이 상당히 크다.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전자에 비해 후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누진세율체제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프리랜서인 납세자 A가 2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첫해의 소득은 5천만 원, 그 다음해의 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이 경우, 첫해에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고, 두 번째 해에는 1억 원에 대해서는 10%인 1천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해에 납부하는 세금은 총 2천만 원이 되고, 첫째 해의 세금과 합하면 2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은 총 2천 5백만 원이 된다. 한편 근로자인 B는 첫째와 둘째 해의 소득이 각각 1억 원씩의 연봉을 받았다. B는 첫째 해와 둘째 해에 각각 소득의 10%인 1천만 원씩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2년 치 세金的 합계는 총 2천만 원이 된다. A와 B의 2년간 소득은 동일하게 2억 원이지만, 그 2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A가 B보다 5백만 원 더 많다. 이는 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며, 두 해에 동일한 소득을 얻는 B와 달리 A는 소득은 연도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소득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총소득이 동일한 정규적으로 연봉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례세율(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소득세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1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는 첫째 해에 5백만 원, 둘째 해에 1천 5백만 원, 총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B의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해에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A와 B는 두 해에 걸쳐 벌어들인 소득도 같고 납부하는 세금도 같다. 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면 소득의 변동성으로 인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 얼마를 벌어들인든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2.2. 사회보장제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변동성

해마다 소득 차이가 큰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소득변동성은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으며, 예술인도 94.0%가 가입하며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⁶¹⁾.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데, 직장

61)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가입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근거로,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부과하는 이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예술인들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37.3%, 직장가입자가 29.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8.5%,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7.8%를 구성하고 있다⁶²⁾.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표 3-8>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3가지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소득점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과 근로·연금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산식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어 소득에 대한 등급이 매겨지고, 거기에 재산과 자동차를 따로 등급을 매겨 최종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표 2-18〉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수준	보험료 산정 방법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소득 최저보험료 19,780원 적용
연 소득 336만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점수 계산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원의 2,835.0928점)$
연 소득 6억 2,772만 원 초과	17,796.15점 (상한 보험료 3,911,280원)

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산정 방법(2023년 8월 17일 접속).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그런데 이때 소득변동성이 큰 예술인의 경우 특정 연도에 갑자기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면, 다음 해에 소득이 크게 줄더라도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보험료가 환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물론 다음 해 수익이 줄어들면 그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줄어 들 수 있지만, 누진세율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므로, 소득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의 경우 갑자기 오른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상

62)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대적으로 큰 부분도 있다. 수입이 많은 때에는 올라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지만, 수입이 현저하게 적어졌을 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술인은 한 해 갑자기 증가한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변동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촉 증명원은 해당 기관 또는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공공예술기관 및 단체조차 이러한 해촉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리한 보험료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3. 근로자에 비해 부족한 세액 공제 항목

개인이 지불하는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결정된다. 공제 항목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세의 수준을 결정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 매우 다양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예술인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예술 분야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는 노란우산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두 가지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생활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생활 안전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것이 이들의 직업을 지속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을 4대 보험의 대상으로 포섭하거나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대상인데, 이들 또한 생활 안전성의 면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항목에 있어서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들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및 전세대출금상환액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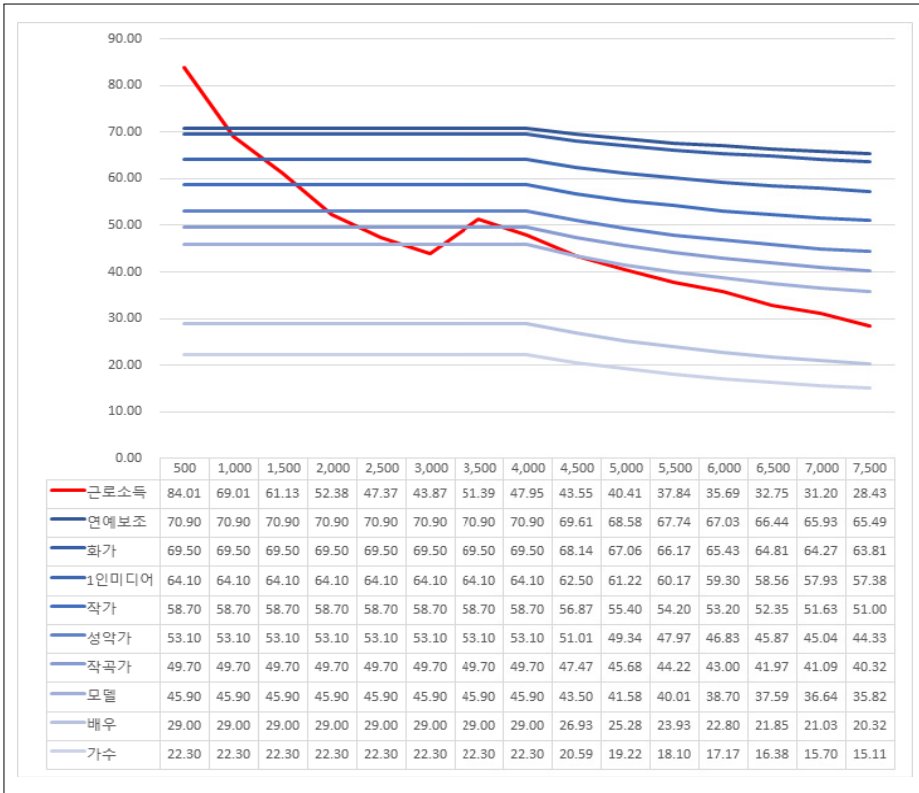
4. 배우 및 가수에 대한 경비 인정율의 형평성 문제

예술인의 소득세는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다른 직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경비 인정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용의 인정 정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술인의 세부담은 경비용 수준이 높으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경비용 수준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예술인이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해 소득세 납부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술인과 근로자의 경비 인정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1]은 2022년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보고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여 업종코드 94의 개인 예술인과 근로자의 단순경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업종코드 94의 세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필요경비의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주요 항목을 포함한 공제율이다. 즉 근로자만 공제를 받는 내용들을 거의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는 2021년 귀속소득의 연말정산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그림 2-2] 예술인 소득의 업종·수입금액별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과의 비교¹⁾

(단위: %)



주: 1)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기본율 및 초과율)을 적용하여 업종별 수입금액별 수입금액 대비 경비율을 추정하였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주요 소득·세액 공제(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2021년 귀속소득의 소득수준별 평균 공제를 적용)를 적용하였음.

자료: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국세청,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_6호, 2023. 3. 29.

[그림 3-1]의 개인 예술인과 근로자의 경비율 비교 그래프를 보면, 개인 예술인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당해연도 수입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이 적용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소 낮은 수준인 초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천만 원 초과분이 클수록 평균 경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래프에 나타난 급여 구간 전체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5백만 원일 때는 공제율이 84.01%인데, 총급여가 4천만 원이

되면 공제율이 47.95%가 되고, 총급여가 7천5백만 원이면 공제율이 28.43%로 총급여 5백만 원일 때에 비해 55.5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개인 예술인의 경우,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비교적 변동 없이 높은 수준의 경비 인정률을 보여 주고 있고 이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천만 원이 초과되어 초과율이 적용되어도 근로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비 인정률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개인 예술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비 인정률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1]을 보면 배우 등과 가수와 같은 실연 예술인들은 필요경비율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어, 전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공제율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업종들은 저소득 구간에서는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 공제율보다 낮으나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소득의 공제율보다 예술인 인적용역 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예술인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4천5백만 원을 넘으면 가수와 배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비율이 근로소득의 공제율보다 높다. 연예보조서비스와 화가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근로소득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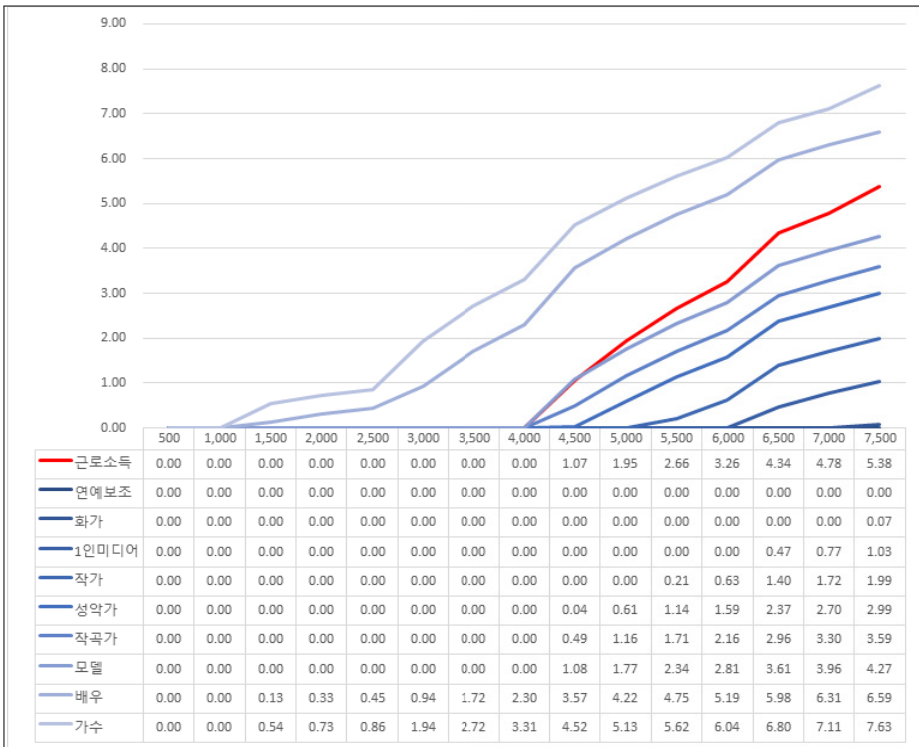
[그림 3-2]은 [그림 3-1]에 나타난 경비율 및 공제율과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금액(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대비 세금의 비율을 즉, '실효세율'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 예술인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근로소득과 비교하였다.⁶³⁾

이에 따르면 수입금액 1천만 원까지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실효세율은 0이다. 그러나 배우와 가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수입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다른 예술인 업종은 물론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와 가수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며,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세금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일 때 실효세율은 배우 6.59%, 가수 7.63%로 다른 예술인들보다 높으며,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도 1.2~2.3% 포인트 정도 높다.

63) 참고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도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라는 점에서 본 소절에서 논의하는 실효세율의 세율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본 소절에서는 업종별 경비율, 소득별 공제율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효세율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수입금액 대비 세액의 비율을 실효세율로 표현하였다.

[그림 2-3] 예술인 소득의 업종·수입금액별 실효세율 - 근로소득과의 비교

(단위: %)



주: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기본율 및 초과율), 근로소득공제율, 2021년 귀속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나타난 각종 공제항목의 소득수준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 소득과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자료: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국세청,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_6호, 2023. 3. 29.

이는 국세청이 고시한 배우 등과 가수의 필요경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으로, 이들 업종에서 실제 지출하는 필요경비가 상당히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개의 업종(배우, 가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등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출퇴근 비용 외에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정한 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그 의복을 지급하였을 때, 그 의복 대금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종업원 식대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상당히 적다. 근로자의 필요경비 중에서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경비는 직장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배우나 가수와 같은 실연 예술인의 경우 의상 구입이나 대여, 메이크업, 소품 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은 사업의 수입에서 개인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근로자나 다른 업종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과 관련한 비용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데 반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 배우나 가수 등은 관련한 비용을 개인이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연습실이나 소품·악기 구입 및 수리비, 각종 인건비, 접대비, 회의비 등도 이들의 예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비 인정을 수준을 고려하면 배우나 가수는 업무 수행에 부대 경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어떠한 투자나 비용 지출 없이 인력 그 자체로 모든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듯하다.

배우 등과 가수가 1인 미디어나 화가, 작가 등과 같이 가시적인 재료비, 임대료 등은 소요되지 않지만, 같은 업종코드 내의 모델이나 성악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보다 낮은 것 또한 합리성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5.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의 격차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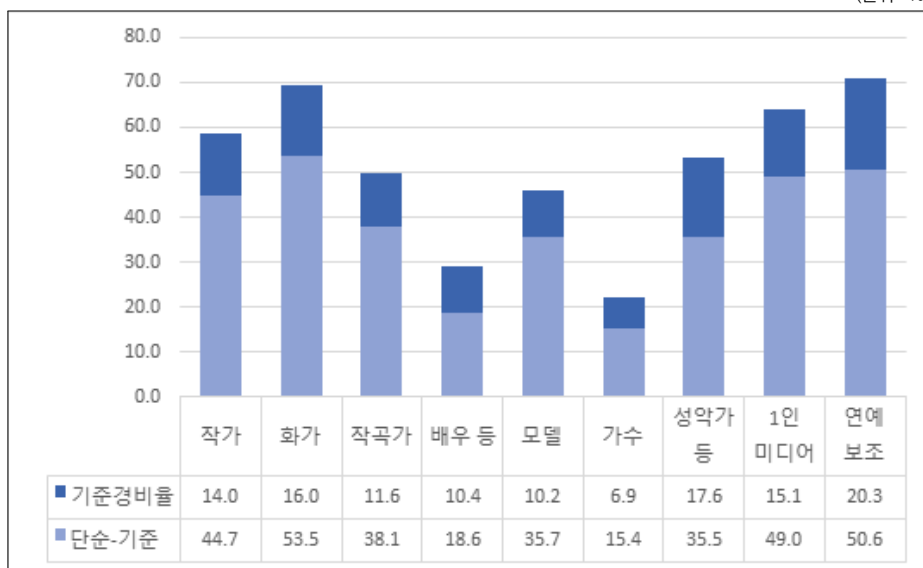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 인정율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만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 즉,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비용은 실비를 적용하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 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천5백만 원 미만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가 커서 주요경비로 지급한 실비가 상당히 적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부담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의 개념에 따르면 인적용역은 ① 독립된 자격으로,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③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 예술인의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주요경비 금액이 적을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로 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다. 거기에 기준경비율마저 낮으면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값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림 2-4] 단순경비율(기준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

(단위: %)



자료: <표 20> 참조

[그림 3-3]은 개인 예술인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업종별 전체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단순경비율을 나타내고, 막대의 윗부분에 진한 색으로 칠한 부분이 기준경비율을, 연한 색의 아랫부분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단순경비율이 낮은 배우와 가수의 경우에는 격차가 각각 18.6% 포인트와 15.4%포인트이지만 다른 업종들의 경비율 격차는 35% 포인트를 상회하고, 최대치인 화가의 경우에는 53.5% 포인트에 달한다.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의 세부담 격차는 세부 담의 공평성 문제와 함께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불만을 야기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을 구분하는 경계선 부근에서 소득이 약간만 상승하여도 세부담이 크게 뛰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소득 증가분보다 세금 증가분이 더 커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시장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소득은 소득이 증가하기 이전보다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공평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 직면한 납세자는 과세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는 ‘사업소득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태’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을 3천6백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유인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의 경우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계속성·반복성 여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일시적·우발적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해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제3장

해외의 예술인을 위한
조세제도 사례 분석

제1절 호 주

본 장에서는 해외의 예술인 소득과 관련해 국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예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과세체계가 유사하다.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예술인의 특수한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이를 배려한 특별 규정을 만들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 중 예술인, 특히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사례를 받는 개인 예술인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소득세제의 일반적인 큰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원칙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내용 중 예술인의 소득세제와 관련한 특별 규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1. 호주의 인적용역소득 과세원칙

호주의 소득세제는 포괄주의 과세를 기본으로 한다. 포괄주의 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과 달리 호주에서는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이라고 부르고,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액(deductions)’을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공제액은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s)’와 ‘특정공제(specific deductions)’로 구분되는데 일반공제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며, 특정공제는 필요경비 외에 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를 의미한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반공제와 특정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은 한국의 과세표준과 같은 개념이다.⁶⁴⁾

〈표 3-1〉 호주의 소득세의 과세체계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 공제액(deductions)

공제액 =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s) + 특정공제(specific deductions)

* 일반공제: 필요경비

* 특정공제: 법에 규정된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예외 없이 회계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활동을 기록하고 설명해야 하며, 그 기록을 통해서 세부담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한국과 같이 추계과세제도, 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수익 또는 경비를 추계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과세제도가 없으므로 모든 소득세 납세자는 세금과 관련된 수입과 경비를 기장하고, 그 기장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기장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 방식⁶⁴⁾'을 적용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발생주의 회계방식(복식부기)'을 적용해야 한다.⁶⁶⁾ 그러나 사업소득이더라도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즉,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Income, PSI)의 경우에는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실연, 창작, 기술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리 예술인들과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인적용역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기장해야 하듯이, 호주 또한 인적용역 소득 중에서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식부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거래에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일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지출 내용이 그 사업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6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 199.

65) 현금주의 방식은 실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임. 발생주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들어왔을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함.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함.

6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200~201.

- 사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
- 사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본재나 소비자의 순환에 의존하는 경우

호주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프리랜서도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로 취급되기도 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은 고용형태에 따라 ① 피고용인(employee), ② 피고용인으로 취급되는 도급업자(contractor), ③ 독립적인 도급업자로 구분되는데,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프로젝트별 고용 형태에 따라 독립적인 도급업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독립적인 도급업자는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형태인데, 즉 개인 예술인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때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2.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적용을 통한 세부담 평탄화

가. 소득변동성이 큰 전문가를 위한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운영

호주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호주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과 같이 변동성이 큰 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 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부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일한 규모의 소득을 오랜 기간 나누어 취득하면, 누진세율이 완화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소득의 경우 일생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누진세율과 소득 발생 연도의 세금 부과 방식에 의해 변동성이 큰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 비해 많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67) 도급업자를 피고용인으로 취급할지 여부는 계약 수행 능력(인적용역 제공자), 대가의 지급 근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의 공급책임, 위험부담, 근로 작업의 통제권,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근로와 기술의 제공이며, 계약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으로 취급된다. 한편, 근로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대가가 지급된다면 피고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용역을 제공한 자는 독립적인 도급업자(③)에 해당된다.

호주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평균소득과세제도(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⁶⁸⁾’를 도입하고 있다. 평균소득과세제도는 과세 연도의 소득이 이전 4개 연도의 소득 평균보다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변동성이 큰 특정 인적용역 소득의 세부담 평탄화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전문가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평균소득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전문가는 주로 예술인, 스포츠맨, 발명가 등이다. 호주 세무국은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적용을 허용하는 특정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⁶⁹⁾

- 작가 또는 발명가(Author or inventor)
- 공연예술가(Performing artist)
- 제작 관련 업종(Production associate)
- 운동선수(Sportsperson)

제작 관련 업종(Production associate)은 예술적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품 창작에 기여하는 자로서 영화감독, 안무가, 예술감독, 사진감독, 영화 편집자, 조명감독, 음악감독 등을 포괄한다. 평균소득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 상금, 보증·광고·인터뷰·논평에 따른 수입 및 유사한 서비스의 대가, 발명품 특허 수입이 포함된다.

나.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적용 원칙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전문가의 과세소득(Taxable Professional Income, TPI)’이 이전의 4개 연도의 ‘TPI 평균((Average of TPI, ATPI)’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세액은 다음의 4단계를

68) 평균소득과세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 2022,
<https://www.ato.gov.au/Forms/Income-averaging-for-special-professionals-2022/>,
(2023. 8. 6. 접속)

69) Australian Taxation Office, Types of special professionals

<https://www.ato.gov.au/Forms/Income-averaging-for-special-professionals-2022/?anchor=Typesofspecialprofessionals#Typesofspecialprofessionals>(2023. 8. 20. 접속)

거쳐 계산된다.

1) 과세소득 - 공제액 = 과세소득(TPI)

납세자의 과세 연도의 총과세 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수입금액)에서 공제액(deductions)을 공제하고 전문가의 과세소득(TPI)을 산출한다(일반 인적용역과 동일한 원칙의 적용)

2) (과세 연도 이전의 4년의 TPI 총액) ÷ 4 = 4년간의 과세소득 평균치(ATPI)

과세 연도 이전의 TPI의 4년간의 평균치(ATPI)를 계산한다. 만약 전문가가 과세소득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소득을 계산한다.

- ① 첫째 연도의 ATPI = 0
- ② 둘째 연도의 ATPI = 첫째 연도 TPI의 1/3
- ③ 셋째 연도의 ATPI =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 TPI 합계의 1/4
- ④ 넷째 연도의 ATPI = 첫째, 둘째, 셋째 연도 TPI 합계의 1/4
- ⑤ 다섯째 연도 이후의 ATPI = 직전 4개 연도 TPI 합계의 1/4

3) $TPI \leq ATPI$: 정상 소득세율 적용

과세 연도의 TPI가 ATPI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득세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4) $TPI > ATPI$: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적용

과세연도의 TPI가 ATPI보다 큰 경우에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TPI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 ① ATPI에 대해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② $\{(TPI - ATPI) \div 5\} + ATPI$: 해당하는 금액에 맞는 세율 적용
TPI 중 ATPI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을 ATPI에 더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③ $[(2)-(1)] \times 5$

위 ②의 세액에서 ①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5를 곱한다.

④ $[(3)+(1)]$: 해당 과세 연도 세액 결정

위 ③의 결과로 산정된 세액에 ①의 세액을 더하여 해당 과세 연도의 TPI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다.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위와 같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만 높아진 '과세대상 연도의 소득'을 '이전 4년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그 이하인 부분 포함)과 '초과분'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전자인 '이전 4년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후자 즉, '이전 4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총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4년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1/5만 이전 4년 평균 소득에 더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 외 4/5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4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의 1/5이 '5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의 성과 및 한계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높은 소득변동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예술인을 비롯한 전문가 직종의 특수한 업무 형태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 발생 당해 연도의 과세 원칙과 누진세율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소득이 평균치보다 많은 해에는 누진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평균치보다 적은 해에는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위의 두 단계 중 ① 단계만 평균 소득과세제도를 적용하고 ② 단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구성은 예술인의 수입이 매우 저소득인 해에 매우 유용하다. 예술인은 작품을 발표한 해에 일시적으로 크게 수입이 발생하지만, 다시 준비 기간에 돌입하면 수입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평균소득과세제도를 도입하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이 제도는 예술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소득세 제도 원칙의 부작용을 겪는 것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준비 기간과 같은 저소득 시기에 세부담을 겪지 않도록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이

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예술인의 세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고소득 예술인의 납세 유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아서 최고 세율이 의료부담금을 포함하여 47%이며, 18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5,400만 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호주의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18만 호주달러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2~39%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6.6~38.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는 3억 원까지 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 5천만 원은 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최고세율은 49.5%인데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⁷⁰⁾. 이러한 문제로 호주에서는 고소득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세부담 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국적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세부담 완화는 이들의 조세회피를 개선하고 세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변동성이 매우 큰 특정 납세자가 누진세율의 허점에서 불리해지지 않게 하여 과세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적용이 일생을 총합하여 보았을 때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이와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원칙보다 적게 또는 많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각각 전문가들의 돈을 버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형평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소득세제 원칙이 보이는 누진세율 체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예술가나 발명가 등의 전문가 집단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고려한 어느 정도의 제도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0)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2023. 7. 19. 접속.

3. 폭넓은 인적용역소득 비용 공제 적용

호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추계과세제도에 의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이 없고,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과 경비를 기장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인적용역으로 대부분 소득을 얻게 되는 예술인들도 이러한 기장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경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없다 보니 각종 비용 공제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경비율 인정을 받는다.

인적용역소득의 비용 공제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인정 범위가 넓다. 재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 사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점유비(occupancy expenses), 운영비(running expenses), 사업용 자동차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⁷¹⁾ 사무실 점유비는 주택을 사무실로 점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출 이자, 임대료, 재산세(council rates), 토지세, 주택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주택의 일부분을 배타적으로(exclusively)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almost exclusively) 사업수행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무실 점유비를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다. 운영비는 전기료, 전화요금, 시설·집기의 감가상각비, 가구·비품의 보수비, 청소비 등을 의미한다. 운영비용은 주택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을 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점유비와 달리 그 장소가 명확하게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동차 운영비는 자택에서 고객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특수관계자의 주택 포함) 임대료, 저당 차입금 이자, 재산세(rates), 토지세, 비서 업무 등 일을 도와준 데 대해 배우자, 기타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대가,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비용들은 인적용역소득의 비용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호주에서 활동하는 개인 예술인들은 인적용역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부과받는 데에 있어 위의 내용들을 증빙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방식으로 기장하여 입출금 내역이 실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기장하면 되는 것으로, 인적용역의 소득과 지출이 명확하면 비교적 인정받기가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 수준의 금액이 넘으면 개인 예술인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준경비율도 위의 내용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220~222.

수입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일반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 관련 경비, 즉 납세자가 직접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우리보다 다소 넓다. 호주는 근로 관련 경비를 자동차 및 교통비, 의복·세탁·드라이클리닝 비용, 재택근무 사무실 운영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도구·장비, 기타 자산 비용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택근무 사무실 운영비의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근무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자택의 일부를 사용자의 사업에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사무실 운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재택근무 사무실 운영비는 자택 중 명확하게 근로 장소로 활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호주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의 상황에 따라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즉 출퇴근을 통해 우리로 따지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는 그에 따른 경비를 제출하며 인정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해서 경비를 따로 기장해 제출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경비율을 정부가 정해 일정 부분을 제하고, 그 이후에 세금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이 같다. 즉 호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리랜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나 우리나라 모두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상당 부분 회사 경비로 업무에 필요한 장비, 장소,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 모두 개인이 수입에서 이러한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호주만큼 경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단순경비율에 이러한 다양한 경비를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인정하는 범위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아일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Artists’ exemption from income tax)’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 경감 제도 중 하나로, 1969년 아일랜드의 창작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찰스 호히 T.D.(Charles Haughey T.D.)는 1969년 예산 연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며,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더욱 격려하고 예술이 번영할 수 있는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화가, 조각가, 작가와 작곡가들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것을 재정 법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⁷²⁾. 이는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창작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창작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⁷³⁾.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오랫동안 아일랜드 예술인들의 재정적 지원제도로 기능해 왔으며, 여러 차례 개정하며 보완되었다. 1997년 「세금통합법」 제195조에 따라, 작가, 작곡가, 시각 예술가와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출판, 생산 또는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특정 상황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는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에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2011년에는 연간 세금에서 소득 금액 4만 유로가 상한선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대한계점이 5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⁷⁴⁾

72) Department of Finance(2015). Report On Tax Expenditures. Department of Finance. p.16.

73) The Arts Council(2005). Artists’ Exemption Scheme. The Arts Council. pp.3, 9.

74) Department of Finance(2015). Op. Cit.. p.16.

2.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적용 기준⁷⁵⁾

가. 창의적인 창작 활동에만 적용되는 면세 혜택

예술가 소득은 예술 활동과 예술작품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적용하는데, 소득세 면세가 적용되는 예술작품은 다음과 같다.⁷⁶⁾

- 책 또는 기타 글쓰기(books or other writings)
- 희곡(plays)
- 음악 작곡(musical compositions)
- 그림 또는 사진(paintings or other similar pictures)
- 조각(sculptures)

소득세 면세는 위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 예술가(creative artists)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작업(original and creative work)에만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공연예술 연출가, 영화감독 등 해석 예술가(interpretative artists)와 배우, 댄서 등 전문 예술가(professional artists)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창작 예술가의 경우에도 창작물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대적인 수입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⁷⁷⁾

논픽션 작품의 경우 예술 비평, 예술사, 예술을 주제로 한 저술, 전기 및 자서전, 유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저술, 아일랜드 또는 아일랜드인에 관해 30년 이상 된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 근거한 저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제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통찰을 포함하고 선구적인 작품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일반적

75) 아일랜드 세입원 홈페이지 예술가 공제(Revenue - Artists' Exemption) (출처: <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income-and-employment/artists-exemption/index.aspx>) 및 아일랜드 조세통합법 제195절(Section 195 Taxes Consolidation Act 1997(TCA 1997) 참고.

76) 이하 본 소절의 내용은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Artists' Exemption)”의 설명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income-and-employment/artists-exemption/index.aspx>, 2023. 4. 26. 접속.

77) McAndrew, C. & McKimm, C.(2010).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artists i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The Arts Council/An Chomhairle Ealaíon and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p.156.

인 견해를 수정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 창작작 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제 적용 범주에 속하지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작품일 경우 면제에서 배제된다. 또는 학생들을 위한 저술이나 거래, 사업, 학습 등에 사용되는 저술, 그리고 신문, 저널, 잡지 등 매체에 출판된 언론 저술, 광고나 공공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 편곡 또는 각색된 음악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⁷⁸⁾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는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사업소득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예술가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⁷⁹⁾

나. 창의적인 창작 활동의 인정 기준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 및 게일타흐트부는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를 위해 1997년 「조세통합법」 제195(12)조에 따라,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세를 인정받는 작품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original and creative work)이어야 하고,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cultural or artistic merit)가 있거나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95조에 따른 면세를 보장하기 위해 세입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품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작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 독창성과 창의성(Original and Creative)

작품은 창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생성된 창조성이 있는 독특한 작품일 경우에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됨.(제195(4)조)

78) 아일랜드, Tax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195 (7), (8).

79) Theater Forum, Tax and Self-Employed Fact Sheet, Theater Forum, Vol. 3, April, 2020, p. 1.

2) 문화적 가치(Cultural Merit)

작품은 형식 및/또는 내용의 질(quality)로 인해 국내 또는 국제 문화의 하나 이상의 측면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경우에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제195(5)조)

3) 예술적 가치(Artistic Merit)

작품은 형식 및/또는 내용의 질이 관련 범주의 작품 표준(canon)을 상당히 향상하는 경우에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제195(6)조)

다. 예술가의 직접 신청 및 심의를 통한 선정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 및 자료를 국세청(the revenue commissioners)에 제출해야 한다.

- 예술가 공제 신청서
- 예술 작품 샘플
 - 책 또는 기타 글쓰기: 전자 버전 또는 출판된 책의 사본 1부
 - 희곡: 대본 사본 및 서명된 제작 계약서
 - 음악 작곡: 음악이나 가사에 크레디트가 있는 링크 또는 CD 및 기타 관련 정보
 - 그림 또는 사진: 좋은 화질의 작품 사진 6장과 현재까지 예술 경력에 대한 간단한 이력서
 - 조각: 위의 그림과 같은 항목
- 추천서 및 지원(supporting) 문서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이나 글에 대한 선불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불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에 청구해야 하며 출판사로부터 해당 책이 출판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불금이 지급된 연도에 청구를 제출했지만, 책이 아직 출판되지 않아 공제 대상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

다. 출판된 책을 수령 후 결정이 된다면, 납부한 세금을 검토하고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불된다.

예술 작품에 대한 보조금과 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지불금이 만약 예술가 면세 자격을 얻은 작품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 역시 5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한 해 이전의 예술 작품 판매 소득은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정 이후의 예술 작품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 논픽션 도서를 제외한 향후 모든 작품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아일랜드 세입위원회(Revenue Commissioners)에서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와 문화유산 및 게일타흐트부 장관(the Minister for Culture, Heritage and the Gaeltacht)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⁸⁰⁾. 결정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예술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품이 창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생성된 창조성이 있는 독특한 작품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이 국내 문화나 국제 문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정도의 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⁸¹⁾

제도 초기에는 공제 신청자가 아일랜드 국가에 거주하여야만 하고 주소지가 다른 국가에 있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국가 또는 영국 거주자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이 제도가 EU 법과 호환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거주 지역의 확대는 예술가들이 아일랜드에 거주하도록 장려하려 했던 제도의 목적을 소실시키는 결과를 낳았다⁸²⁾.

라. 소득세 면세의 적용 방식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연 5만

80) 아일랜드 조세통합법 제195절(Section 195 Taxes Consolidation Act 1997(TCA 1997))은 특정 예술 작품이 독창적이고 일반적으로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창작물임을 세입위원회(Revenue Commissioners)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함.

81) 아일랜드, Tax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195 (4), (5), (6).

82) Department of Finance(2015), Op. Cit., p.17.

유로(한화 약 7,300만 원)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5만 유로를 초과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똑같이 세금이 적용된다.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 활동 소득액) 총액의 5만 유로 이하: 면세

5만 유로 초과: 일반 소득세율 적용

예술가의 소득 면세제도는 오직 '소득세'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Pay Related Social Insurance, PRSI) 또는 일반사회부담금(Universal Social Charge, US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면세 소득은 고소득자 제한(High Earners Restriction, HIER)⁸³⁾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VAT)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고소득자 제한이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감면 금액을 8만 유로로 제한하는 것으로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예술품의 작가가 고소득자 조세지원 제한(High Income Earners Restriction: HIER)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소득자 조세지원 제한 규정은 ① 연 소득이 12만 5천 유로 이상인 경우, ② HIER 적용 대상 특정 조세지원 총액이 8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③ HIER 적용 대상 특정 조세지원액이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HIER에 적용되는 경우에 과세대상 소득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⁸⁴⁾

$$\text{과세대상 소득} = T + (S - Y)$$

T = 조정 이전의 과세대상 소득 (총소득에서 면세 등 조세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

S = 해당 연도에 적용된 HIER 적용 대상 특정 조세지원 총액

Y = 8만 유로(조세지원 제한 금액 기준, 위의 ②)와 해당 연도의 총소득(조세감면 적용 이전의 총소득)의 20%(조세지원 제한 기준 ③) 중 큰 금액

83) 고소득자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음 참조:

www.revenue.ie/en/self-assessment-and-self-employment/guide-to-self-assessment/hier.aspx

84) Irish Tax and Customs, High-Income Individuals' Restriction Tax Year 2010 onwards, Tax and Duty Manual, Part 15-02A-05, June 2021, pp. 4~5.

즉 감면 적용 이전의 연간 총소득이 12만 5천 유로 이상인 개인의 조세감면 총액이 8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총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8만 유로와 총소득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조세감면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도 HIER가 적용되는 특정 조세 감면에 해당한다.⁸⁵⁾ 이는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이 예술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적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⁸⁶⁾.

예술품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신청하였을 때, 국세청은 6개월 이내에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개월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30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예술인은 국세청에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해의 1월 1일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3.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성과 및 한계

3.1.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하는 재정제도

아일랜드 국세청에서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예술가는 총 3,874명이며, 범주별로 보면, (a) 책 또는 그 외 저서 1,145명, (b) 희곡 272명, (c) 음악 작곡 615명, (d) 그림 및 사진 등 유사한 성격의 작품 1,500명, (e) 조각품 342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⁸⁷⁾

2010년 예술위원회의 의뢰로 아일랜드 예술가의 생활 및 근무 조건에 대한 연구⁸⁸⁾가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직업 예술인이 그들의 작품에서 얻는 평균 소득은 2008년에 1만 5천 유로 이하였으며, 8천 유로 이하를 버는 예술인은 50%였다. 2008년 아일랜드 예술인의 평균 소득은 2만 5천 유로를 조금 넘었고, 예술인의 50%는 19,832

85) Irish Tax and Customs, High-Income Individuals' Restriction Tax Year 2010 onwards, Tax and Duty Manual, Part 15-02A-05, June 2021, pp. 4~5.

86) Department of Finance(2015), Ibid., p. 16.

87)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Artists' Exemption, <https://www.revenue.ie/en/corporate/information-about-revenue/statistics/other-datasets/artist-exemption.aspx>, 2023. 5. 12. 접속.

88) McAndrew, C., & McKimm, C.(2010). Op. Cit.. p. 156.

유로 이하를 벌었다. 데이터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25%의 아일랜드 예술인은 11,475 유로 이하의 총개인 소득을 가졌고 75%는 31,000 유로 이하의 총개인 소득을 가졌다. 한편 많은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예술가 면세 제도에 따라 소득이 반환된 개인의 평균 예술 소득이 2012년에 11,014 유로, 2013년에 11,200 유로로 아일랜드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가 상당 부분 아일랜드 예술인의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48%의 예술가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작가는 75%, 시각예술가는 69%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 예술가(interpretative artists)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예술 및 영화에서 면세를 이용하는 비율은 29%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음악 작곡가 등이 포함된다.⁸⁹⁾

2005년 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연구보고서의 예술인 소득 면세제도 수혜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주로 저소득 예술가에게 혜택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술가들의 경우 공제된 소득의 비율은 총소득의 1/3만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나머지는 과세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이 면제되었다.⁹⁰⁾

〈표 3-2〉 2004-2013 아일랜드 예술인 소득 면세 비용 및 청구자 수

연도	예술가 면세 비용	청구자 수
2004	32.1	1,970
2005	34.8	2,220
2006	65.9	2,890
2007	27.4	2,650
2008	21.8	2,630
2009	22.1	2,590
2010	9.6	2,350
2011	5.5	2,520
2012	4.8	2,490
2013	5.3	2,580

자료: Department of Finance(2015), Op. Cit., p. 18.

89) McAndrew, C., & McKimm, C.(2010), Ibid. p. 156.

90) The Arts Council(2005). Op. Cit., pp3-4, 10-18.

3.2. 제도 폐지 vs. 유지의 논쟁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예술계에서는 환영받는 제도로 오랫동안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폐지의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와 유지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가. 제도 폐지의 주장

아일랜드 과세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형평성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제도의 수혜자는 구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창작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중(deadweight)⁹¹⁾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가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아일랜드 재무부는 2006년 발행된 내부 검토⁹²⁾를 통해 예술가 공제 폐지를 고려했지만 결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 재무부에 따르면, “면세의 폐지는 저소득층 예술가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예술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5만 유로 미만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세 폐지는 권장되지 않는다.”라며 제도의 유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제도의 폐지가 소득세 체계의 기반을 넓히고,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정책 목표에 더욱 부합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예술가가 제공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이익은 인정하지만 사회의 다른 부문보다 세금 체계를 더 인정받을 만한 가치는 없으며 다른 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술인들은 지원금을 통해 직접 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면세제도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예술 활동을 장려하지 않고, 대신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1) 사중(Deadweight)은 인센티브 또는 제도의 부재 시 어차피 일어났을 행동의 양을 포착하려고 시도하는 경제 개념임.

92) The Arts Council(2005). Op. Cit..

제도를 둘러싼 관리와 정의의 불확실성도 폐지 찬성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술인 소득 면세를 결정할 때 세입 위원회에서 작품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판단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세금항소위원회와 기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로 인정된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원래 의도가, 결국 유명인, 정치인과 스포츠인의 전기 작가와 같은 작품에도 면세가 적용된 이래로 제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은 이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 심사를 소설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모든 소설은 작품의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의 품질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제도 유지의 주장

그러나 아직까지 아일랜드 예술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예술 지원제도의 하나로 아일랜드에 예술인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문화적 관점에서 모두 아일랜드 예술에 유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신진 예술인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겸업을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성공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모든 아일랜드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력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2005년 10월 예술가들의 여러 증언⁹³⁾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예술가 면세에 대한 검토 기간 동안, 많은 예술인 대표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심 기관으로부터 40건의 제출물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출물이 면세 유지에 찬성하였다. 검토 당시 대부분 예술인들의 면세를 지지하는 약 100건의 의견과 예술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면세 유지를 지지하는 1,64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93) The Arts Council(2005), Testimonials on the Artists' Tax Exemption Scheme. The Arts Council.

또한 이 제도가 수년에 걸쳐 고소득자 제한과 소득 상한선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예술가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예술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출처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상당한 소득을 가진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 현재 예술가 소득 면제를 받는 청구자의 약 10%가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수입을 벌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소득 상한선의 도입은 예술인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조세 위원회가 제시한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는데, 고소득자 제한과 공제받을 수 있는 적정 소득 금액의 상한선 도입 후 공제 비용이 상당히 감소했다. 청구자 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2015년 기준 2,580명)이지만, 제도의 총비용은 2006년 거의 6,600만 유로에서 2013년 530만 유로로 감소하며 국고 절약 및 제도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3절 스페인

1. 예술가 지위 향상을 위한 국왕령의 발표

스페인은 최근 예술인의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부와 주요 예술가 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2019년 9월 스페인 하원의 만장일치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75가지 조항’을 채택했다. 「예술가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보고서(Informe de la Subcomisión de un Estatuto del Artista)(이하 「예술가법 보고서」)」⁹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조항에는 예술인의 세금, 노동, 사회보호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문이 가진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적 진단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예술가법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왕령 26/2018(Royal Decrees 26/2018)’ 및 ‘국왕령 302/2019(Royal Decrees 302/2019)’를 발표하고 예술인 지위 향상 및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마련됐다. 국왕령 26/2018은 예술 분야 직군들이 가지는 단속적 특성(intermittence), 상호 이질성(heterogeneity), 불안전성(instability)을 이해하고, 예술인이 비활동 기간 중 사회분담기여금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임신부, 출산 후의 9개월까지는 여성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후 국왕령 31/2023에서는 예술인 소득과 저작권과 관련한 원천징수를 감축이 이루어지는 등 예술가법 보고서에서 제안된 조항들이 점차적으로 적용·시행 되고 있다.⁹⁵⁾

스페인 교육문화스포츠부 문화산업협력국장 아드리아나 모스코조 델 프라도 에르난데즈(Adriana Moscoso del Prado Hernández)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 제정의 목표

94) http://www.congreso.es/backoffice_doc/prensa/notas_prensa/61825_1536230939806.pdf

95) 예술가법 보고서 조항별 진행 현황은 다음 참고.

‘LEIRE GUTIÉRREZ VÁZQUEZ et al.(2023), *MEDIDAS APROBADAS Y DESARROLLADAS EN EL MARCO DEL ESTATUTO DEL ARTISTA*, Instituto Autor’

https://www.institutoautor.com/wp-content/uploads/2023/07/SEGUIMIENTO-ESTATUTO-DEL-ARTISTA_IA-2.pdf

및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페인의 예술가들을 위한 법 제정의 목표 및 내용⁹⁶⁾

1980년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2018년에 예술적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승인하였다(12월 28일 국왕령 26/2018과 4월 26일 국왕령 302/2019). 이 제도는 권고에서도 강조한 문화노동자인 예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고 예술 활동이 존중받고 발전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갖추는 입법구조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수년간에 걸쳐 문화 분야의 대표들이 주장해 온 세 개의 주요한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다. 각 분야의 세금 제도, 노동 및 사회보장보호, 그리고 연금 지급과 저작권료 수입 사이의 호환성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창작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정신적 유산(spiritual heritage)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 및 노동 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처음으로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창작 예술 활동에 대한 은퇴연금 제도 마련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세제정책(fiscal measure)을 통해 예술 창작이나 문화산업 분야의 성장, 문화의 시민 접근성을 독려하는 문화산업 분야의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우리는 스페인 창작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해당 분야의 전문화, 그리고 우리 문화·창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첫걸음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⁹⁷⁾

아드리아나 모스코조 델 프라도 에르난데즈,
문화산업협력국장, 교육문화스포츠부 (스페인)

위의 내용과 같이 스페인에서는 예술인 지원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성 재정 지원보다는 연금, 저작권료, 세제 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예술가법 보고서」에서도 'VI.2. 과세에 관한 제안 및 권고'를 통해 예술가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장에서는 예술 작업으로 인한 소득 활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제안의 목표를 밝히고, 예술인 변동 소득 평균화 적용, 원천징수 감면 등 과세와 관련한 제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제12항에서는 예술인 과세 관련 제안의 두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은 소득에 비례하고 공정해야 한다. 둘째,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어서 제13항에서는 예술 작업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해당 작품의 해석, 실행, 또는 창작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간이 있음을 강조한다. 제15항에서는 과세 적용 대상을 밝히는데, '매우 자주 문화 사업에서 얻은 수입이 다른 활동에서 다른 수입으로

96) UNESCO(2020). 「문화와 예술인의 노동환경」, UNESCO & 문화체육관광부.

97) 차민경(2020), 「UNESCO 〈문화와 예술인의 노동 환경〉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21.

보충되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제안된 특정 과세는 문화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만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술인의 불규칙 소득과 관련한 세제 개편에 대한 제안,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의 제안

「예술가법 보고서」는 예술인들의 소득변동성과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연차별 세금 편차로 인해 예술인들이 소득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호주와 같은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직 제정 논의 중이며 실행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예술가법 보고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한 예술가 소득평균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가. 변동 소득을 기반한 평균화의 도입

「예술가법 보고서」가 제안하는 예술가 소득평균화 방식은 제17항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소득변동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각 예술인 개인의 '변동 소득(medias móviles)'을 기반으로 평균화하고 이를 소득세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최근 3~4년 동안 신고한 근로 또는 경제 활동의 순소득이 얼마나 변동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평균화한 금액을 그 예술인의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다. 최근 4년간의 소득을 평균화하는 호주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은 다소 다른데, 「예술가법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식⁹⁸⁾은 다음과 같다.

- 매년 획득한 노동 또는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신고된 순이익을 소득으로 본다.
- 소득평균화 과세제도는 '최대 연간 한도(límite máximo anual, 30만 유로)'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 없이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98) http://www.congreso.es/backoffice_doc/prensa/notas_prensa/61825_1536230939806.pdf

- 최대 연간 한도까지는 신고된 순소득의 이전 연도 소득의 단순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이전 연도는 2년~4년의 연속적인 연도를 뜻하며, 때에 따라 3~5년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4년 동안 일이나 경제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이전에 일한 연도의 평균을 적용한다.
- 평균 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 변동이 관련이 없는 경우 스페인 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추가로 합산할 수 있다.

스페인의 소득평균화 제도는 최근 2~4년간 신고된 소득을 단순산술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평균값이 최대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예술인의 경우 평균값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2~4년간 신고된 소득의 평균값 × 평균값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소득평균값이 최대 연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 소득세 원칙을 적용)

보고서가 제안하는 ‘최대 연간 한도(límite máximo anual)’는 연 30만 유로(한화 약 4억 3,801만 원)로 초고소득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술가법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과세 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의 소득변동성을 고려해 소득 수치를 균질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3~5년간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각 개인 예술인의 소득의 변천(evolución)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평균 세율의 적용

「예술가법 보고서」가 제안하는 두 번째 방안은 제18항에 제시된 것으로 과거 스페인에서 적용된 바 있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율 평균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예술 및 창작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어서 적용하는데, 예술 활동의 소득에 다소 많은 세율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연 예술 활동 소득신고액) ÷ 3 + 기타소득액} = 평균세율}

제18항은 예술 활동으로 발생한 연 소득 신고액을 3으로 나눈 값에 세금 부과 대상인 기타소득을 더한 몫을 적용하여 평균 세율을 나타내는 이론상(teórico) 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이 직업적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보다 누진세율체계에 의해 더 많은 세금을 납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액이 당해에만 발생했더라도 사실상 3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예술 활동의 신고액을 적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⁹⁹⁾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연간 소득액에 2를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이는 해당 소득액이 2년간의 준비에 의해 나온 결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불규칙 소득 30% 면제

「예술가법 보고서」가 제안하는 세 번째 방안은 제19항에 제시된 불규칙 소득의 30% 면제 제도이다. 현행 스페인의 개인소득세법은 18.2항과 32.1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얻은 소득(rentas obtenidas de forma notoriamente irregular en el tiempo)”과 “세대 기간이 2년 이상인 소득(rentas con un período de generación superior a dos años)”에 대해 금액의 70%만 세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해 얻은 정규 소득의 30%에 대한 일반 면제를 설정하고, 연간 한도는 최대 €300,000까지이다.

이미 불규칙한 소득에 대한 면제 혜택이 시행 중인 것으로 국왕령 439/2007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열거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창작자가 얻은 인적소득이나 지적재산권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학상 또는 예술상 등의 각종 상금과 관련된 경우는 포함된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이 감면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예술 프로젝트나 예술 활동이 가지는 특징과 관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18.2항과 32.1항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세대 기간을 가진 소득이거나, 매우 다른 유형에서 얻은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 활동의 경우 2년 이상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으며, 진행되더라도 2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는 수입이 없는 준비 기간 이후 한꺼번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한 해에서 다음 해로 금액이 극도로 변동하는 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9) http://www.congreso.es/backoffice_doc/prensa/notas_prensa/61825_1536230939806.pdf

또 다른 부분은 한 예술인이 제공하는 예술 활동이 유사한 형식이면 안 되는데, 유사한 유형의 경제활동을 정기적 또는 상습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얘기하는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얻은 소득”은 제공되는 활동이 비슷한 유형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데, 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조명감독은 여러 프로젝트에 종사하지만 조명감독이라는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이를 불규칙한 방식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예술가법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예술가와 창작자의 불규칙한 소득에 맞게 법률 35/2006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18.2조 및 32.1조에 개인 소득세 목적상 불규칙한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소득 가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형태의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닌, 금액의 변동성이 큰 소득을 포함하고 소득의 변동성이 해마다 매우 큰 예술인도 이에 포함하여 불규칙 소득의 30%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신고된 소득금액의 산술평균값의 50%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의 32.1조 단락을 정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소득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예술 활동 이외에도 많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불규칙한 소득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활동이 제공되지만 이는 결국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불규칙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라. 제안의 진행 경과

「예술가법 보고서」가 제안하는 많은 것들이 국왕령에 의해 제정되고 있지만, 「예술가법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예술인 소득평균화 제도는 아직 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8개 부처 간에 협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16일 열린 제18회 공연예술협회 법률 세미나 ‘예술가법: 성과 및 현안’ 라운드 테이블의 패널로 참여한 변호사 하비에르 안드레이드(Javier Andrade)는 현재의 예술가법은 표준이 아니라 부처 간 위원회가 다른 직업 그룹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 개혁을 정교화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하면서, 세금 분야에 채택된 모든 조치에는 징수 비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지적했다.¹⁰⁰⁾ 스페인 엔터테인먼트법협회

전 회장이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 전문가 메이블 클림트(Mabel Klimt)는 “예술가 법령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많이 연결된 포괄적인 규정으로, 특히 재정 부분이 항상 구현하기 가장 어렵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예외를 찾아야 한다.”라며 예술가법의 특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러나 예술가법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은 예술인의 소득과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분배하여 적용해, 재정적 영향이 적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문가 그룹을 위한 특정 세금 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⁰¹⁾

3. 예술인의 원천징수세 부담 완화

예술인 소득평균화 제도는 아직 제정 논의 중이지만 2023년 1월, 스페인 국왕령 31/2023에 의해 새로운 예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다. 국왕령 31/2023은 국왕령 439/2007에 규정된 개인 소득세 규정을 수정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예술인들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였다. 「예술가법 보고서」는 보고서 제22항에 소액의 노동 및 경제활동 소득과 저작권 선지급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을 낮춰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23항에 공개 공연 출연과 관련한 고용관계로 인한 소득에는 최저 원천징수율인 2%로 낮추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2023년 1월에 발표된 국왕령 31/2023의 제1항은 기존의 국왕령 439/2007의 소득세 규정인 제86조 제2항 제1절을 수정하여, 1년 미만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공연, 시청각 및 음악 분야의 예술인의 특수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천징수율 15%에서 최저원천징수율 2%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최저원천징수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시청각 및 음악 예술 및 해당 활동의

100) https://sympathyforthelawyer.com/hub/estatuto-del-artista-laboral-fiscal-seguridad-social/(2023년 8월 20일 접속)

101) https://confilegal.com/20220626-los-artistas-reclaman-a-la-comision-interministerial-de-iceta-un-regimen-fiscal-especial-que-tenga-en-cuenta-sus-ingresos-irregulares/(2023년 8월 20일 접속)

개발에 필요한 기술 또는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창작 및 실연뿐만 아니라 기술, 행정, 기획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세율인 15%가 적용되어, 위의 바뀐 최저원천세율은 프리랜서 예술인만 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왕령 31/2023의 제2항은 국왕령 439/2007 제95조 제1항을 수정하여 예술인의 경제활동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7%로 낮추도록 하였다. 위의 제1항은 공연, 시청각 및 음악 분야의 특수고용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2항의 경우 모든 장르에서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해당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 자가 처음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었을 때는 그 첫해와 이어지는 두 해에 7%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7%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에서 발생한 직전 연도의 총소득이 1만 5천 유로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납세자의 총소득 중 7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¹⁰²⁾

4. 공공연금과 예술 활동 양립을 위한 건의

「예술가법 보고서」는 예술인의 과세와 관련한 조항뿐 아니라, 예술인의 노동과 사회 보장을 위한 제안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VI. 4장 ‘연금 수혜와 예술 소득의 양립성’에서는 예술인의 소득과 연금수혜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의 창작 및 예술 활동과 관련한 활동 또는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은 연금과 연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이러한 소득 금액의 일부를 연금보험에 기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예술가법 보고서」는 이러한 퇴직연금 수급과 저작권 소득 취득이 양립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예술 활동에서 파생된 소득이 모든 종류의 공공 혜택과 연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몇 년 동안 제기되고 있는데, 예술인들도 연금에 기여금을 내고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 소득과 관련하여

102) Royal Decree 31/2023 (1월 24일) [https://www.boe.es/eli/es/rd/2023/01/24/31\(2023년 8월 20일 접속\)](https://www.boe.es/eli/es/rd/2023/01/24/31(2023년 8월 20일 접속))

논란이 많은데, 지적재산권 수익이 근로와 관련한 수입이 아니므로 연금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인이 축적한 지적 자본이 예술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저작물이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향유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수익과 연금과의 연동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들의 일부가 국왕령 320/2019에 반영되었다. 국왕령 302/2019는 은퇴연금과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된 소득의 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 따르면 기여형 사회보장 퇴직연금의 수혜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에서 파생된 소득을 받는 예술 창작 활동을 연금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창작 활동에 대해 다른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술 활동과 퇴직연금 양립을 규정하는 왕실입법령(Royal Legislative Decree) 8/2015 제249조 제4장 제1항은 기여형 퇴직연금 금액의 100% 수령과 양립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나열한다. 여기에는 연극, 더빙, 버라이어티 쇼, 뮤지컬, 노래, 춤, 예술 감독, 영화, 오케스트라, 뮤지컬 각색, 무대, 시청각 작업, 서커스, 인형극, 미술, 각본가, 수행예술가 또는 실연자 등 수행예술, 시청각 또는 음악 활동에서의 예술가, 해석자 또는 수행자가 해당된다. 또한 해당 활동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또는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며, 문학,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저자가 수행한 다른 사람을 위한 작업과 자영업 활동도 해당된다. 제2항에는 기여형 퇴직연금에 최저연금지원금, 출산지원금, 남녀격차감소지원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해외의 예술인 소득세제와 관련한 특별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아니며, 선진 사례로서 살펴볼 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예술인의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점차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던 예술인의 높은 소득변동성과 관련하여 호주는 ‘평균소득과세제도(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제도의 문제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호주 또한 소득 발생 당해 연도의 과세 원칙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술인과 같이 소득변동성이 큰 직업군에게 과도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호주는 전문 업종이라고 하는 예술인, 스포츠맨, 발명가,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제작 관련 업종 등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군들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특히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준비 기간에 이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많은 전문가 그룹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던 반면, 고소득 예술인의 납세 유도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

스페인도 아직 제도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득평균화 제도가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예술가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보고서(「예술가법 보고서」)」에서 제시된 예술인 소득평균화 과세제도는 총 3가지 시행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변동 소득에 기반을 둔 평균화의 도입, 평균 세율의 적용, 불규칙 소득 30% 면제가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아직 스페인의 8개 부처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재정적 영향은 적으면서도 과세형평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Artists' exemption from income tax)’ 가장 오래된 예술인에 대한 조세 혜택 제도 중 하나인데, 1969년부터 아일랜드의 창작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연 5만 유로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5만 유로를 초과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과 중소득 예술인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제도이다. 주로 창작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데, 독창성과 창의성(original and creative), 문화적 가치(cultural merit), 예술적 가치(artistic merit)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아일랜드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수차례 제도 폐지의 논란을 겪고 있고, 현재도 논란 중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소득세를 특정 직업군에게 일방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형평성에 위배된다. 과세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추가 과세가 생기거나 과세 부담을 느낄 때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정 그룹에게 특별 감면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일어나지 않을 때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조세 저항을 겪고 논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또한 예술인에 대한 소득세제를 검토할 때, ‘과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아일랜드의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는 예술가와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며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편익이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와 그에 부과되는 세금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능적 관계로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술인의 소득세제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술인들이 현재 소득세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일랜드처럼 예술인에 대한 일방적인 면세에 대한 주장은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같은 차원에서 스페인에서 진행된 소액의 노동 및 경제활동 소득과 저작권 선지급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인하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의 높은 소득변동성에 따른 문제 등은 역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국가들이 도입을 적용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폭넓은 비용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세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그 필요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예술인이 해외와 같이 소득 세제에 관해 이러한 소득변동성이나 비용 공제 등과 관련하여 그 현황이 어떠한지, 또한 그 외 우리 소득세제 체계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와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제4장

예술 분야 소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및 쟁점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설계

가. 조사 목적

본 연구는 예술인의 소득세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며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소득의 종류와 세금에 관한 예술인의 인식, 예술 활동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경험,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FGI를 통해 현장 예술인이 경험하고 있는 세금 신고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인의 정책 수요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설계

FGI와 설문조사 모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GI는 국악,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미술 장르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동일한 분야의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는 예술인 소득의 형태, 소득세 신고의 경험과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인터뷰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활동 예술인이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관련 업계의 문화 및 관례, 수요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장르별 활동 및 세금 신고 과정의 특징이라든지 프리랜서 예술가로서 겪는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23년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2)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예술인의 연 소득 현황,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 신고 현황 및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23년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다. 조사내용

FGI 질문지와 설문조사 문항은 예술인 연 소득 현황, 예술인의 세금 신고 경험, 주요 항목에 대한 예술 활동의 소요 비용,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동일한 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개요는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 개요

구분	FGI 개요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10명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500명
조사 방법	FGI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3. 7. 12., 2회	2023. 7. 19.~7. 31.
조사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엠브레인
조사 내용	① 소득 현황 및 세금 신고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개인소득이 가장 많았을/적었을 때의 연소득 • 개인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 전체 연소득 중 소득 종류별 비중 • 개인소득 세금 납부 방법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의 어려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을 준 대상 • 종합소득세 미신고 이유 ② 예술 활동 소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③ 세금 관련 애로사항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인지 정도 • 세금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 응답자 특성

FGI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활동 장르는 국악,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미술로 크게 구성되었고 활동 유형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이 각각 5명, 3명, 2명으로 분포되었다. 연령대는 30대와 40대에 집중되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구성하고 자 하였으나, 세금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터뷰에 부담을 느껴 거절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로 구성하게 되었다.

본문 내 참여자의 성별, 연령, 활동 장르 및 유형은 그대로 작성해 두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성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표 4-2〉 FGI 참여자 명단

구분	성별	연령	장르	유형	구분	성별	연령	장르	유형
A	여	40	국악	창작	F	남	30	미술	창작
B	남	40	문학	창작	G	남	30	연극	실연
C	여	40	음악	기술지원 및 기획	H	남	30	영화	실연
D	여	40	연극	창작	I	여	30	국악	실연
E	여	50	영화	기술지원 및 기획	J	남	40	국악	창작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활동 장르별로는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순으로 많았고, 활동 영역별로는 창작, 실연 분야가 많았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 전체 ■		(500)	100.0
활동 장르	문학	(54)	10.8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18.6
	사진	(17)	3.4
	음악	(81)	16.2
	대중음악	(24)	4.8
	국악	(35)	7.0
	무용	(5)	1.0
	연극, 뮤지컬	(64)	12.8

구분		사례 수	비율(%)
■ 전체 ■		(500)	100.0
	영화	(69)	13.8
	연예(방송 포함)	(33)	6.6
	만화, 웹툰	(16)	3.2
	복수	(9)	1.8
활동 영역	창작	(236)	47.2
	실연	(146)	29.2
	기술(무대, 영상 등)	(56)	11.2
	기획/행정	(45)	9.0
	그 외	(17)	3.4
성별	여성	(309)	61.8
	남성	(191)	38.2
연령	20대	(89)	17.8
	30대	(171)	34.2
	40대	(79)	15.8
	50대	(71)	14.2
	60대 이상	(90)	18.0

제2절 조사 결과

1. 예술인 소득의 유형과 세금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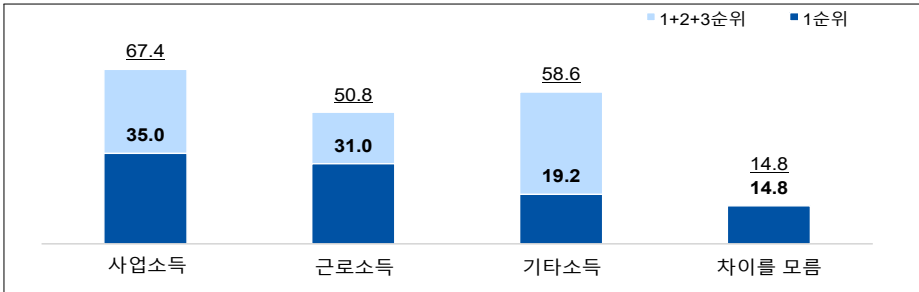
1.1 예술인 소득의 유형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는 예술인도 예외가 아니다. 납세 방식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예술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주요한 소득 유형이다. 「2021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고용 형태는 1인 사업체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5.7%),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박직’(20.8%),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17.0%) 순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은 7.5%에 불과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의 소득 형태 대부분이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이뤄져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예술인의 소득세제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 먼저 예술인 소득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의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이 3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하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31.0%, 비정기적 용역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19.2%로 뒤를 이었다(1순위 응답 기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율이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었다. 1+2+3 순위를 종합한 결과 역시 사업소득 76.4%, 기타소득 58.6%, 근로소득 50.8%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인 개개인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연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율이 다소간 달라지겠으나, 예술인의 소득 대부분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개인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 점]



근로소득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근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강사 활동을 병행하거나, 예술단체나 기관 등에 고용되어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예술인의 가장 주요한 소득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국악 장르의 실연자이긴 하지만 공연 활동 수입이 일정한 편이 아니다 보니 예술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연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 소득을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34%, 기타소득이 6% 정도 될 거예요.”(FGI 참가자 I, 30대/여성/국악/실연)

“배우들의 수입은 주로 사업소득이고요, 가끔 행사나 특강 등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주변 동료 중에 연기학원 강사 활동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많아요.”(FGI 참가자 H, 30대/남성/영화/실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의 활동 장르나 영역에 따라서도 소득의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로 원고료나 인세 수입이 대부분인 ‘문학’ 장르에서는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의 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음악’이나 ‘국악’ 등 단체에 고용되거나 예술강사 활동이 많은 장르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예술인 소득의 유형

구분		사례 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를 잘 모름
전체		(500)	35.0	31.0	19.2	14.8
활동 장르	문학	(54)	22.2	16.7	37.0	24.1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24.7	25.8	30.1	19.4
	사진	(17)	23.5	29.4	11.8	35.3
	음악	(81)	28.4	46.9	9.9	14.8
	대중음악	(24)	33.3	16.7	20.8	29.2
	국악	(35)	34.3	48.6	8.6	8.6
	무용	(5)	0.0	60.0	40.0	0.0
	연극, 뮤지컬	(64)	43.8	31.3	14.1	10.9
	영화	(69)	47.8	31.9	14.5	5.8
	연예(방송 포함)	(33)	48.5	30.3	15.2	6.1
	만화, 웹툰	(16)	75.0	12.5	6.3	6.3
	복수	(9)	44.4	11.1	33.3	11.1
활동 영역	창작	(236)	27.5	24.6	27.1	20.8
	실연	(146)	35.6	34.9	16.4	13.0
	기술(무대, 영상 등)	(56)	60.7	30.4	3.6	5.4
	기획/행정	(45)	37.8	53.3	4.4	4.4
	그 외	(17)	41.2	29.4	23.5	5.9

한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를 모른다’는 응답도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용역 수행이 반복적인지 일회적인지에 따라 구분되지만, 정작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예술인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술인들은 세율에 따라 두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비를 지급받는 예술인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세금 3.3%와 기타소득 세금 8.8%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타소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대한 불신이나 조세저항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은 계약할 때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비를 받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점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게 부당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업소득으로 받고 싶어도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계약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해요.”(FGI 참가자 J, 40대/남성/국악/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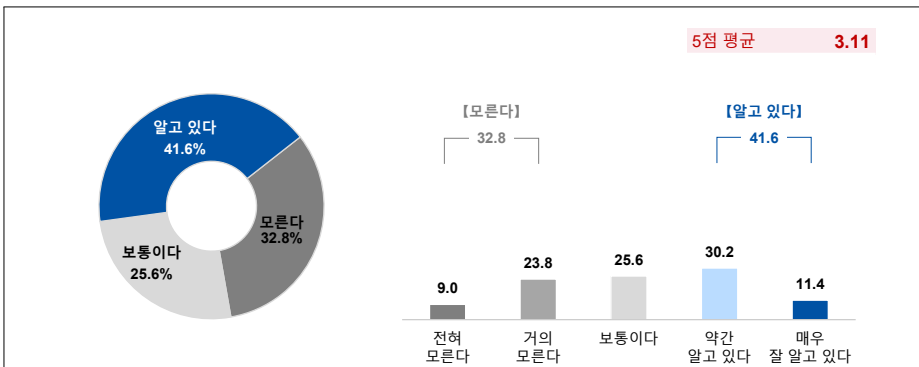
“원고료를 받을 때 예전에는 세금을 3.3% 뺐는데 요즘은 8.8%를 떼더라고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더 떼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마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의 차이를 모르고 원고료를 받는 예술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FGI 참가자 B, 40대/남성/문학/창작)

1.2 예술인의 소득세 인식

다음으로 예술인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예술인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6%이고 ‘모른다’가 32.8%, ‘보통이다’가 25.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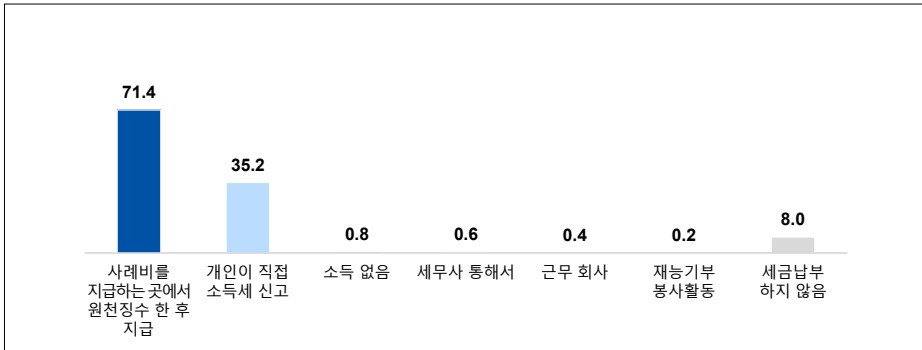
[그림 4-2]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인지 정도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 점]



[그림 4-3] 개인소득 세금 납부 방법(중복 응답)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중복 %]



예술인의 소득세 납부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 예술인은 대부분 ‘사례비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 한 후 지급’(71.4%)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35.2%)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세금 납부 하지 않음’이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는 장르별로 보면 무용과 국악은 각각 100.0%와 91.4%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 한 후 지급’이 가장 많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는 만 화, 웹툰(50%), 영화(47.8%)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60대 이상’은 23.3%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을 표시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 없음’이 3.3%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노년층으로 갈수록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GI 결과에서도 예술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저소득 예술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다. 대체로 연 소득이 적다 보니 세무 대리인 비용 지출의 부담이 크고 그 효용도 낮아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술인들이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하였다.

〈표 4-5〉 예술인의 세금 납부 방법(중복 응답)

		사례 수	사례비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 징수 한 후 지급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소득 없음	세무사 통해서	근무 회사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세금 납부 하지 않음
■ 전체 ■		(500)	71.4	35.2	0.8	0.6	0.4	0.2	8.0
활동 장르	문학	(54)	59.3	22.2	7.4	0.0	0.0	0.0	14.8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59.1	30.1	0.0	0.0	2.2	0.0	19.4
	사진	(17)	52.9	41.2	0.0	0.0	0.0	0.0	17.6
	음악	(81)	90.1	25.9	0.0	0.0	0.0	0.0	4.9
	대중음악	(24)	58.3	29.2	0.0	0.0	0.0	0.0	16.7
	국악	(35)	91.4	34.3	0.0	0.0	0.0	0.0	0.0
	무용	(5)	100.0	40.0	0.0	0.0	0.0	0.0	0.0
	연극, 뮤지컬	(64)	73.4	43.8	0.0	0.0	0.0	0.0	1.6
	영화	(69)	72.5	47.8	0.0	2.9	0.0	0.0	0.0
	연예 (방송 포함)	(33)	69.7	42.4	0.0	3.0	0.0	0.0	0.0
	만화, 웹툰	(16)	75.0	50.0	0.0	0.0	0.0	0.0	0.0
	복수	(9)	55.6	44.4	0.0	0.0	0.0	11.1	22.2
활동 영역	창작	(236)	61.0	35.6	1.7	0.4	0.8	0.4	12.3
	실연	(146)	79.5	32.9	0.0	0.7	0.0	0.0	4.8
	기술	(56)	83.9	42.9	0.0	1.8	0.0	0.0	0.0
	기획/행정	(45)	80.0	33.3	0.0	0.0	0.0	0.0	4.4
	그 외	(17)	82.4	29.4	0.0	0.0	0.0	0.0	11.8
성별	여성	(309)	73.1	32.0	0.6	0.0	0.3	0.3	9.4
	남성	(191)	68.6	40.3	1.0	1.6	0.5	0.0	5.8
연령	20대	(89)	77.5	36.0	0.0	0.0	0.0	0.0	5.6
	30대	(171)	77.8	41.5	0.0	0.0	0.6	0.0	2.9
	40대	(79)	73.4	34.2	0.0	3.8	0.0	0.0	2.5
	50대	(71)	66.2	38.0	1.4	0.0	1.4	0.0	9.9
	60대 이상	(90)	55.6	21.1	3.3	0.0	0.0	1.1	23.3

“예술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신고 방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복잡하니까 크게 관심도 없고요. 게다가 워낙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신고의 효용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야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마저도 국세청 알람을 통한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있고요.”(FGI 참가자 C, 40대/여성/음악/기술지원 및 기획)

일부 예술계에서는 예술 활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종의페이백(pay-back)이라는 형태로 사례비를 받은 이들이 사례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어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도 아직까지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술인의 자부담금으로 사례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현금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을 때에도 봉투에 현금을 넣어 드리고, 공연을 도와준 동료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또 공공 부문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할 때에도 기획자, 연출가의 사례비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페이백 형태를 통해 지급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겠죠.”(FGI 참가자 A, 40대/여성/국악/창작)

“시각예술 작가들의 경우 회계 처리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업자 있는 친구에게 돈을 주고페이백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례비 지급을 하는 경우가 터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가 누락되겠죠.”(FGI 참가자 F, 30대/남성/미술/창작)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최근에도 지원 사업에 인건비 항목이 없으면페이백 형태로 종종 사례비 지급을 합니다.”(FGI 참가자 E, 50대/여성/영화/기술지원 및 기획)

2. 높은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 부담 및 사회보장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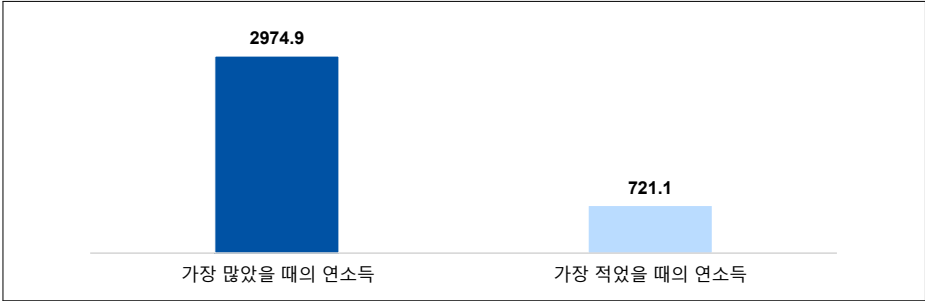
2.1 예술인의 높은 연 소득 격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변동성이 큰 직업군에서 갑자기 큰 수입이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일생을 통해 보았을 때 수입이 일정한 사람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술 활동을 통한 예술인의 연 소득이 최저 721.1만 원에서 최고 2,974.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가장 많았을 때의 연 소득은

최저 무용 1,340.0만 원-최고 만화/웹툰 6,143.8만 원으로 나타났고, 개인소득이 가장 적었을 때의 연 소득은 최저 미술 518.3만 원, 최고 사진 1,081.2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개인 소득이 가장 많았을/적었을 때의 연 소득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만 원]



<표 4-6> 예술 활동 소득이 가장 많았을 때의 연 소득

구분		사례 수	1000 만 원 미만	1000 ~2000 만 원 미만	2000~ 3000 만 원 미만	3000 ~4000 만 원 미만	4000 만 원 이상	[평균: 만 원]
전체		(500)	23.6	16.8	20.6	13.4	25.6	2974.9
활동 장르	문학	(54)	48.1	20.4	9.3	5.6	16.7	2350.1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32.3	16.1	20.4	15.1	16.1	2257.5
	사진	(17)	29.4	29.4	11.8	0.0	29.4	2547.1
	음악	(81)	16.0	24.7	22.2	22.2	14.8	2349.9
	대중음악	(24)	50.0	12.5	20.8	0.0	16.7	1639.2
	국악	(35)	22.9	14.3	28.6	8.6	25.7	2702.0
	무용	(5)	20.0	40.0	40.0	0.0	0.0	1340.0
	연극, 뮤지컬	(64)	10.9	18.8	28.1	20.3	21.9	2999.7
	영화	(69)	11.6	7.2	15.9	11.6	53.6	4726.5
	연예(방송 포함)	(33)	15.2	6.1	21.2	15.2	42.4	3942.8
	만화, 웹툰	(16)	0.0	6.3	37.5	12.5	43.8	6143.8
	복수	(9)	33.3	33.3	0.0	11.1	22.2	3314.4

〈표 4-7〉 예술 활동 소득이 가장 적었을 때의 연 소득

구분	사례 수	소득 없음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900만 원 미만	900~1200만 원 미만	1200만 원 이상	[평균: 만 원]
전체	(500)	20.2	23.4	17.0	8.8	10.4	20.2	721.1
활동 장르	문학	(54)	33.3	38.9	13.0	3.7	1.9	575.1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36.6	19.4	17.2	9.7	2.2	518.3
	사진	(17)	23.5	23.5	17.6	5.9	0.0	1081.2
	음악	(81)	11.1	21.0	22.2	14.8	13.6	648.8
	대중음악	(24)	8.3	45.8	12.5	8.3	12.5	526.9
	국악	(35)	5.7	22.9	14.3	2.9	28.6	812.4
	무용	(5)	40.0	0.0	20.0	0.0	0.0	600.0
	연극, 뮤지컬	(64)	14.1	21.9	12.5	10.9	18.8	759.1
	영화	(69)	20.3	15.9	14.5	10.1	13.0	920.7
	연예(방송 포함)	(33)	12.1	21.2	15.2	9.1	6.1	1043.5
	만화, 웹툰	(16)	12.5	12.5	37.5	0.0	12.5	1030.9
	복수	(9)	11.1	44.4	33.3	0.0	0.0	357.8

〈표 4-8〉 예술 활동 연 최고 소득과 최소 소득의 차이

구분		사례 수	[평균: 만 원]	[평균: 만 원]	최고-최소(만 원)
전체		(500)	2974.9	721.1	2253.8
활동 장르	문학	(54)	2350.1	575.1	1775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2257.5	518.3	1739.2
	사진	(17)	2547.1	1081.2	1465.9
	음악	(81)	2349.9	648.8	1701.1
	대중음악	(24)	1639.2	526.9	1112.3
	국악	(35)	2702.0	812.4	1889.6
	무용	(5)	1340.0	600.0	740
	연극, 뮤지컬	(64)	2999.7	759.1	2240.6
	영화	(69)	4726.5	920.7	3805.8
	연예(방송 포함)	(33)	3942.8	1043.5	2899.3
	만화, 웹툰	(16)	6143.8	1030.9	5112.9
	복수	(9)	3314.4	357.8	2956.6

연 소득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장르는 ‘만화, 웹툰’으로 5512.9만 원(최고 6143.8만 원, 최저 1030.9만 원), 다음으로 ‘영화’ 3805.8만 원(최고 4726.5만 원, 최저 920.7만 원), ‘복수’ 2956.6만 원(최고 3314.4만 원, 최저 357.8만 원)

원), ‘연예’ 2899.3만 원(최고 3942.8만 원, 최저 1043.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은 장르는 ‘무용’ 740만 원(최고 1,340만 원, 최저 600만 원), ‘문학’ 1,775.0만 원(최고 2350.1만 원, 최저 575.1만 원), ‘대중음악’ 1112.3만 원(최고 1639.2만 원, 최저 5526.9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연 소득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의 연 소득 차이는 사실상 100배가 날 때도 있어요.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해도 있거든요”(FGI 참가자 C, 40대/여성/음악/기술지원 및 기획)

“시인들은 일 년 동안 원고료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갑자기 문학상 수상으로 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원고료 수입만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일 거예요”(FGI 참가자 B, 40대/남성/문학/창작)

이러한 소득변동성은 예술인들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기도 하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많은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상,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경우 세금이 추가로 산정되었을 때,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가 잦은 예술인들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예술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세금 부과 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2021년에 소득이 많았고 2022년에 소득이 아예 없다면, 2021년도 소득세는 2022년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죠”(FGI 참가자 C, 40대/여성/음악/기술지원 및 기획)

“과세되는 기준 연도와 예술인 수입이 발생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미래 소득이나 지출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라고 할 때 실제로 낼 돈이 없는 거죠. 그 때그때 발생하는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 때문이에요”(FGI 참가자 D, 40대/여성/연극/창작)

2.2 사회보장비 증가의 문제

예술인의 소득변동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복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책정되는데, 일회성 소득이 대부분인 예술인은 단기계약 건에 대한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 소득이 유지되는 것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건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종료 후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소득이 낮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기도 하는 등 정보가 부족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프리랜서 예술인의 소득세는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책정은 지난해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금년도에 부과하니, 예술인들은 매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 일회성 사업소득임을 증명해야 해요. 이 작업을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정책적으로 예술인의 사업소득이 일회적인 것임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예술가도 적지 않을 겁니다.”(FGI 참가자 J, 40대/남성/국악/창작)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 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번거롭게 해서 앞으로 캐스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회사나 단체들도 많고요. 한 해 동안 몇 십 군데의 단체나 기관과 일회성 공연을 행하는데 그 기관에 일일이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업무를 귀찮은 업무로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FGI 참가자 A, 40대/여성/국악/창작)

“기관마다 연락해서 해촉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데, 잘 모르는 기관도 있고 양식이 없는 기관도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나올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어떤

소득이 잡힌 것인지 물어보는 일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번거로운 일이에요”(FGI 참가자 I, 30대/여성/국악/실연)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다. 매년 건강보험료 고지를 받은 후에 부과된 보험료는 낮추기 위해 자신이 일했던 기관에 일일이 연락해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관에서 해촉 증명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회사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발급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기도 하며,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항목의 부족 문제

3.1 예술 활동의 필요경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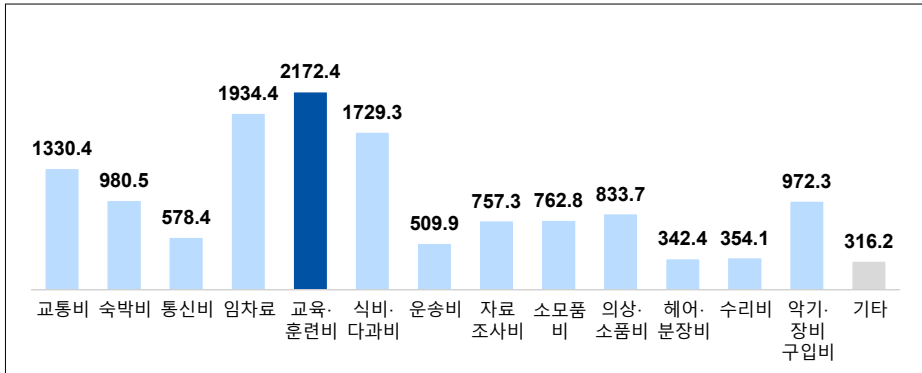
예술 활동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기타소득은 일괄적으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반면,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거나 장부를 기장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아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소득이 3천6백만 원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이때는 영수증 제출을 통한 경비처리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이렇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14개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10년 단위, 1년 단위, 프로젝트 단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예술인들의 장기, 중기, 단기 소요 지출을 항목별로 알아보았다. 본 질문은 개인 비용만을 산정한 것으로 소속된 회사나 단체가 투자한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교육·훈련비(2,172.4만 원)가 가장 높았고, ‘임차료’(1934.4만 원), ‘식비·다과비’(1729.3만 원), ‘교통비’(1330.4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만 원]



〈표 4-9〉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식비·다과비	운송비
■ 전체 ■		13573.9	1330.4	980.5	578.4	1934.4	2172.4	1729.3	509.9
활동 장르	문학	12290.3	587.5	732.9	373.5	1484.3	2250.0	793.1	380.1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15715.9	1594.4	747.3	573.8	3118.9	2891.3	1866.6	1000.1
	사진	7759.4	1170.6	1683.8	390.6	561.8	983.5	580.6	165.9
	음악	14219.5	1482.5	1181.5	533.2	2309.2	3541.1	1159.2	406.7
	대중음악	11661.4	1163.1	460.0	609.6	2062.1	1886.3	1554.3	245.8
	국악	15316.6	1988.7	928.3	730.4	1597.7	3045.1	1499.3	518.9
	무용	10720.0	1160.0	280.0	500.0	320.0	3200.0	680.0	60.0
	연극, 뮤지컬	19563.5	1488.6	2215.3	664.1	3064.1	1365.2	3634.1	661.3
	영화	11397.5	1242.2	612.8	723.4	776.9	1262.7	1713.6	469.3
	연예(방송 포함)	6552.5	979.4	376.5	530.5	268.6	825.9	1612.3	25.5
	만화, 웹툰	8057.7	584.4	590.6	561.3	1006.6	870.6	1590.6	62.5
	복수	13866.8	2137.6	667.1	467.7	2078.0	968.3	2423.4	525.2

〈표 4-10〉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비	의상·소품비	헤어·분장비	수리비	악기·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13573.9	757.3	762.8	833.7	342.4	354.1	972.3	316.2
활동 장르	문학	12290.3	2437.2	269.1	2035.1	240.7	261.3	203.0	242.4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15715.9	1012.9	1463.8	375.6	162.5	259.6	456.5	192.6
	사진	7759.4	248.8	383.5	114.8	85.9	277.1	943.5	168.9
	음악	14219.5	422.2	441.2	409.8	377.2	375.2	1317.5	262.7
	대중음악	11661.4	354.8	424.2	442.5	350.8	281.3	1608.3	218.3
	국악	15316.6	355.7	736.1	1149.4	425.7	684.0	1398.0	259.1
	무용	10720.0	320.0	840.0	1900.0	440.0	60.0	160.0	800.0
	연극, 뮤지컬	19563.5	403.3	1028.6	1444.3	835.6	747.8	1717.4	293.8
	영화	11397.5	558.0	728.9	846.6	274.3	278.7	1267.2	643.0
	연예(방송 포함)	6552.5	224.1	340.9	621.7	281.5	31.8	154.6	279.1
	만화, 웹툰	8057.7	732.5	800.9	81.3	71.9	159.3	653.1	292.2
	복수	13866.8	934.2	903.3	427.2	298.6	222.2	969.4	844.4

장르별로는 연극, 뮤지컬이 1억 9,536.5만 원,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가 1억 5715.9만 원, ‘국악’이 1억 5316.6만 원, ‘음악’이 1억 4219.5만 원 순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영역별로는 ‘기술’이 1억 7856.3만 원, ‘실연’이 1억 4801.2만 원을 예술 활동을 위해 소요했다.

〈표 4-11〉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식비·다과비	운송비
■ 전체 ■		13573.9	1330.4	980.5	578.4	1934.4	2172.4	1729.3	509.9
활동 영역	창작	12903.2	1073.3	851.7	554.0	1937.3	2224.3	1484.5	544.4
	실연	14801.2	1529.0	1393.2	631.2	1720.0	2933.0	2327.5	409.8
	기술(무대, 영상 등)	17856.3	1846.8	940.7	681.4	3041.4	1026.4	1818.0	673.2
	기획/행정	9414.1	1229.2	445.0	464.3	1564.1	964.5	1318.7	481.8
	그 외	9247.8	1760.0	773.5	425.3	1067.9	1891.2	785.3	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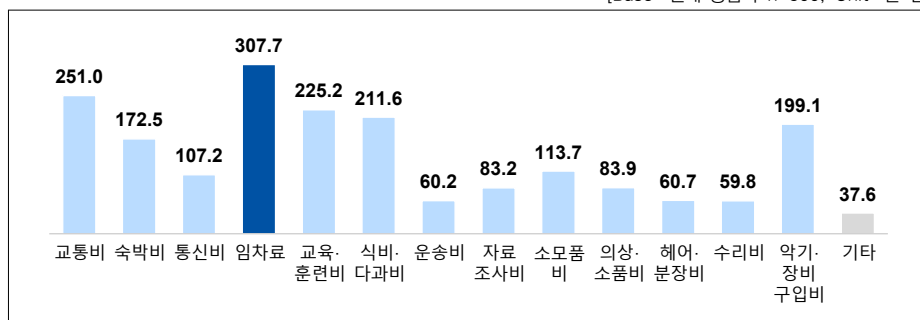
〈표 4-12〉 지난 10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비	의상·소품비	헤어·분장비	수리비	악기·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13573.9	757.3	762.8	833.7	342.4	354.1	972.3	316.2
활동 영역	창작	12903.2	1141.9	871.1	795.9	246.1	267.9	626.0
	실연	14801.2	368.4	580.0	759.2	461.6	362.3	966.7
	기술(무대, 영상 등)	17856.3	405.4	1054.6	1640.4	623.8	847.3	2942.5
	기획/행정	9414.1	580.0	526.1	368.4	184.7	271.8	650.5
	그 외	9247.8	385.6	493.9	572.8	145.3	73.5	187.6

한편 예술인들이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임차료(307.7만 원), 교통비(251.0만 원), 교육·훈련비(225.2만 원), 식비·다과비(211.6만 원), 악기·장비 구입비(199.1만 원), 숙박비(172.5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연습실 임차료와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과 〈표 4-9〉의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장르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복수 4461.6만 원, 국악 2,973.9만 원, 대중음악 2,303.4만 원, 미술 2,167.0만 원, 연극/뮤지컬 2,061.1만 원, 음악 2,052.3만 원, 만화/웹툰 2,020.6만 원, 영화 1,914.5만 원, 문학 1,294.6만 원, 사진 1,116.3만 원, 무용 939.0만 원, 연예 892.7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악기나 재료비에 관한 지출이 많은 장르나 연습실 임차 비용이 드는 장르 중심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 영역별로는 그 외 분야가 2574.5원이며 그다음으로는 기술이 2462.1만 원, 실연이 2134.3원으로 그다음 순이었다.

[그림 4-6]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만 원]



〈표 4-13〉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 훈련비	식· 다과비	운송비
■ 전체 ■		1973.3	251.0	172.5	107.2	307.7	225.2	211.6	60.2
활동 장르	문학	1294.6	101.9	281.9	88.2	76.3	230.0	135.7	67.8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2167.0	267.2	99.1	117.7	590.0	239.9	196.7	89.5
	사진	1116.3	168.3	81.8	61.2	101.8	99.7	61.5	82.6
	음악	2052.3	287.0	156.9	80.1	295.3	309.4	148.8	51.2
	대중음악	2303.4	194.9	93.3	89.2	521.8	563.5	149.3	30.4
	국악	2973.9	418.3	236.9	114.1	255.3	298.7	330.9	64.9
	무용	939.0	164.0	78.0	56.0	70.0	130.0	60.0	10.0
	연극, 뮤지컬	2061.1	242.2	330.5	81.4	312.2	215.2	238.2	64.4
	영화	1914.5	285.0	145.4	136.9	146.0	72.4	343.3	55.5
	연예(방송 포함)	892.7	177.9	77.7	143.8	40.9	65.0	155.8	5.5
	만화, 웹툰	2020.6	213.1	76.9	186.9	312.9	188.1	293.8	17.2
	복수	4461.6	497.0	201.1	173.8	1219.1	281.7	315.7	121.9

〈표 4-14〉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 비	의상· 소품비	헤어· 분장비	수리비	악기· 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1973.3	83.2	113.7	83.9	60.7	59.8	199.1	37.6
활동 장르	문학	1294.6	129.1	31.8	42.7	13.6	10.6	60.4	24.8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2167.0	109.9	232.1	29.3	23.9	40.9	84.9	45.8
	사진	1116.3	52.2	71.6	29.2	20.9	41.8	189.4	54.2
	음악	2052.3	70.2	66.4	102.6	75.0	112.5	250.2	46.5
	대중음악	2303.4	26.0	59.4	64.0	30.8	29.2	422.1	29.6
	국악	2973.9	52.7	168.9	294.9	54.2	203.9	471.7	8.6
	무용	939.0	15.0	30.0	186.0	60.0	10.0	10.0	60.0
	연극, 뮤지컬	2061.1	45.5	79.9	83.0	202.6	31.4	105.2	29.5
	영화	1914.5	97.7	104.0	89.6	42.9	53.1	303.1	39.5
	연예(방송 포함)	892.7	38.2	51.5	68.0	37.0	3.0	16.8	11.7
	만화, 웹툰	2020.6	160.3	117.8	15.6	13.4	58.9	279.7	85.9
	복수	4461.6	204.2	397.8	147.7	72.8	119.4	617.2	92.2

〈표 4-15〉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식비·다과비	운송비
■ 전체 ■		1973.3	251.0	172.5	107.2	307.7	225.2	211.6	60.2
활동 영역	창작	1813.8	193.4	153.9	113.6	318.8	181.8	202.9	78.1
	실연	2134.3	314.5	234.6	114.1	228.0	273.6	225.9	35.0
	기술(무대, 영상 등)	2462.1	317.8	171.3	86.2	327.5	285.3	253.1	54.6
	기획/행정	1452.1	210.2	92.5	70.0	362.5	145.4	174.6	49.1
	그 외	2574.5	394.1	112.9	127.5	626.8	424.1	170.6	75.9

〈표 4-16〉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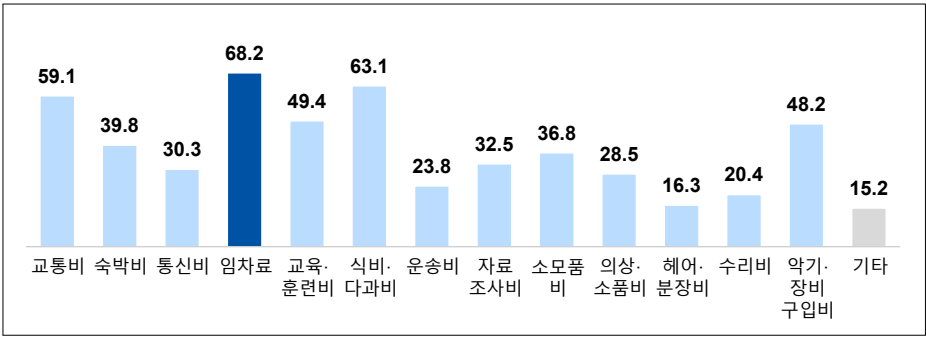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 비	의상· 소품비	헤어· 분장비	수리비	악기· 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1973.3	83.2	113.7	83.9	60.7	59.8	199.1	37.6
활동 영역	창작	1813.8	113.2	130.2	52.4	30.8	47.7	158.9	38.0
	실연	2134.3	52.2	93.8	153.6	66.2	98.0	218.6	26.4
	기술(무대, 영상 등)	2462.1	48.2	104.6	99.6	201.2	40.3	440.6	31.9
	기획/행정	1452.1	88.9	46.9	21.1	25.3	41.2	88.1	36.2
	그 외	2574.5	34.6	262.1	35.9	58.8	11.8	88.8	150.6

주요 항목별 소요 비용은 예술 활동의 장르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방공연이나 지방 촬영이 많은 국악(418.3만 원), 영화(285.0만 원), 연극/뮤지컬(242.2만 원) 장르에서는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차료는 연습 공간이 필요한 미술(590.0만 원)과 대중음악(521.8만 원)이 높았고, 교육·훈련비는 음악(309.4만 원), 대중음악(563.5만 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연 단위가 아닌 예술인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역시 임차료가 68.2만 원으로 가장 컸고, 식비·다과비(63.1만 원), 교통비(59.1만 원), 교육·훈련비(49.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만화·웹툰(726.1만 원), 영화(690.6만 원),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686.9만 원) 순이었고, 활동 영역별로는 창작이 700.4만 원, 그 외가 618.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4-7]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만 원]



〈표 4-17〉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식비·다과비	운송비
■ 전체 ■		531.5	59.1	39.8	30.3	68.2	49.4	63.1	23.8
활동 장르	문학	446.3	50.2	79.1	56.4	33.2	22.3	50.3	27.9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686.9	65.1	34.7	26.8	119.2	72.2	77.9	52.4
	사진	563.4	99.8	55.8	38.9	53.5	30.3	29.5	15.3
	음악	473.0	38.4	33.2	18.1	63.8	79.0	39.0	16.3
	대중음악	449.4	62.4	29.6	28.2	79.8	49.0	36.7	10.2
	국악	580.8	55.3	17.4	13.8	50.5	78.0	48.4	12.1
	무용	506.8	36.8	19.0	11.0	40.0	62.0	49.0	6.0
	연극, 뮤지컬	375.7	29.3	24.5	15.5	35.3	27.6	53.5	19.0
	영화	690.6	111.3	57.6	52.7	69.8	26.2	111.6	22.8
	연예(방송 포함)	208.8	42.8	13.0	24.8	22.0	15.6	45.0	2.1
	만화, 웹툰	726.1	34.1	64.1	39.4	158.6	37.0	109.4	15.2
	복수	670.8	95.7	41.1	22.0	100.2	104.4	84.6	16.3

〈표 4-18〉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장르별 2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 비	의상· 소품비	헤어· 분장비	수리비	악기· 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531.5	32.5	36.8	28.5	16.3	20.4	48.2	15.2
활동 장르	문학	446.3	53.6	12.8	9.4	4.4	5.1	32.5	9.0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686.9	55.6	84.1	11.7	4.8	19.4	36.3	26.6
	사진	563.4	33.7	61.8	24.8	19.3	26.2	66.8	7.8
	음악	473.0	14.5	25.2	23.0	14.5	33.7	50.4	24.0
	대중음악	449.4	9.2	11.2	23.8	16.7	10.2	65.4	17.1
	국악	580.8	19.7	22.7	75.1	18.9	42.0	123.3	3.7
	무용	506.8	10.0	26.0	186.0	53.0	2.0	6.0	0.0
	연극, 뮤지컬	375.7	16.2	23.8	48.2	33.1	12.3	25.0	12.4
	영화	690.6	35.1	39.0	33.4	24.0	25.9	67.6	13.7
	연예(방송 포함)	208.8	6.8	6.5	12.7	16.5	0.0	0.0	0.9
	만화, 웹툰	726.1	75.3	57.5	13.4	12.9	32.6	60.8	15.9
	복수	670.8	62.6	30.6	24.4	11.1	13.3	64.4	0.0

〈표 4-19〉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1

구분		총액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임차료	교육· 훈련비	식비· 다과비	운송비
■ 전체 ■		531.5	59.1	39.8	30.3	68.2	49.4	63.1	23.8
활동 영역	창작	700.4	77.1	59.5	45.2	96.8	54.4	81.7	36.2
	실연	388.7	35.2	22.5	14.9	46.0	53.6	42.7	9.7
	기술(무대, 영상 등)	334.7	40.5	20.5	15.3	19.1	18.8	56.2	13.0
	기획/행정	321.1	48.5	22.6	18.3	64.7	14.8	46.1	15.8
	그 외	618.3	104.1	25.6	36.6	32.1	134.7	48.5	30.6

〈표 4-20〉 지난 1년간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개인적으로 소요된 비용_활동 영역별 2

구분		총액	자료 조사비	소모품 비	의상· 소품비	헤어· 분장비	수리비	악기· 장비 구입비	기타
■ 전체 ■		531.5	32.5	36.8	28.5	16.3	20.4	48.2	15.2
활동 영역	창작	700.4	51.8	52.4	26.6	17.4	26.7	56.9	17.9
	실연	388.7	10.8	16.7	38.0	16.8	22.1	48.8	11.0
	기술(무대, 영상 등)	334.7	16.6	30.4	33.1	21.0	5.4	38.0	6.6
	기획/행정	321.1	27.8	16.4	4.8	3.5	4.8	26.7	6.3
	그 외	618.3	15.0	69.0	22.4	13.5	9.7	11.2	65.3

예술인들의 장기, 중기, 단기 예술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추이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비가 가장 많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임차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훈련비는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워크숍 참여 등도 포함되었는데, 장르별로는 음악(3541.1만 원), 무용(3200.0만 원) 분야가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소요하고 있었고, 활동 영역별로는 실연 분야가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소요했다. 임차료의 경우 미술, 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만화웹툰 등 별도의 작업실이나 연습공간이 필요한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활동 영역별로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하나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선 임차료가 필요하겠고요, 연습장을 가거나 공연장을 가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연습이 매일 있다 보니 식사비도 들고 지방공 연이라도 잡히면 교통비, 식사비가 추가로 들죠. 임차비나 식사비, 숙박비의 일부를 프로덕션에서 책임지고는 있지만 교통비 같은 일상 비용은 온전히 개인 예술인의 몫이에요.”(FGI 참가자 D, 40대/여성/연극/창작)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레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국악계는 레슨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문화가 있다 보니 이걸 경비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교육훈련비가 세액공제 항목이 된다면 현금으로 레슨비를 제공하는 문화도 줄어들고 예술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FGI 참가자 I, 30대/여성/국악/실연)

소모품비 지출이 큰 장르는 미술로 평균 113.7만 원의 두 배인 23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활동의 80%가 재료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상·소품비는 국악(294.9만 원), 무용(186.0만 원)이 높게 나타났고, 수리비와 악기·장비 구입비는 음악, 대중음악, 국악 장르에서 지출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재료비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회화의 경우 물감, 캔버스 구입 비용, 영상의 경우 카메라, 컴퓨터 등 장비 비용, 설치미술의 경우 운반비, 설치비 등이 들어요. 재료비 외에는 작업실, 전시장 대관료가 많이 들고요. 전시장 대관비만 한 달에 7~8천만 원이 듭니다.”(FGI 참가자 F, 30대/남성/미술/창작)

조사의 주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비용으로 의료비, 공연예술 관람비,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들은 몸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도 일종의 예술 활동 비용이에요. 배우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인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중략) 연극인의 경우는 공연 관람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다른 공연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동향을 파악하기도 해야 하니 공연을 자주 보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FGI 참가자 D, 40대/여성/연극/창작)

한편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인터뷰 도중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일상생활과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 자체가 예술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 또는 예술 활동 기간인 경우가 많다. 예술 활동 경비로 지출하는 비용과 일상생활 경비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보니, 사실상 예술 활동을 쓰는 비용이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렇다고 생각을 못한 것이다. FGI에 참여한 많은 예술인들은 인터뷰 도중에 자신이 지불한 비용이 예술 활동을 위한 비용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아마 예술인들 대부분이 잘 모를 거예요. 예술인들이 작품 준비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교통비, 식비, 접대비 등인데 이걸 사실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술 활동을 위한 경비였는데 말이지요. 이제 예술 활동 경비인지 일상생활 경비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한 일상 경비들을 일일이 항목별로 나누어 경비 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FGI 참가자 A, 40대/여성/국악/창작)

3.2 세액공제 항목의 부족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되는데,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임차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관한 지출이 큰데 프리랜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할 때 악기나 의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업무용 차량이 아니므로 경비 인정이 안 되는 식입니다. 예술인에게는 증명 자체가 까다롭죠.”(FGI 참가자 A, 40대/여성/국악/창작)

“문학인은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 활동 경비라고 하면 주거비나 월세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상 작업장 임차비나 다름없는데 이게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아쉬워요.”(FGI 참가자 B, 40대/남성/문학/창작)

특히 예술인이 많이 지출하는 항목 중 하나는 교육훈련비임에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나 배우 같은 실연자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특기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 관람 및 전시 관람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연습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공연을 보면서 저희 창작 활동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공연이 아니라도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일종의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이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FGI 참가자 J, 40대/남성/국악/창작)

“예술 활동을 위한 전시나 공연 관립 비용이 문화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훈련비로라도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게 예술 활동의 일부이니 까요.”(FGI 참가자 E, 50대/여성/영화/기술지원 및 기획)

4. 세금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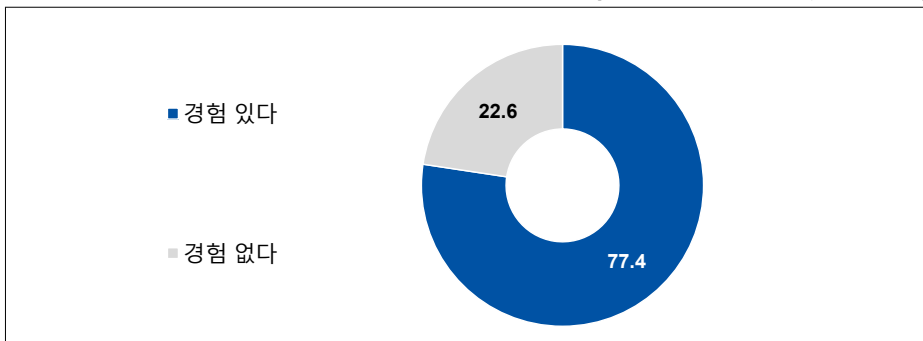
4.1 예술인의 소득세 신고 경험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 활동 수입의 대부분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예술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대상인 예술인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본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아직 전체의 1/4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중복%]



특히 문화과 미술 등 연 소득이 적고 기타소득이 많은 장르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대중적 장르인 만화/웹툰, 연예, 연극/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등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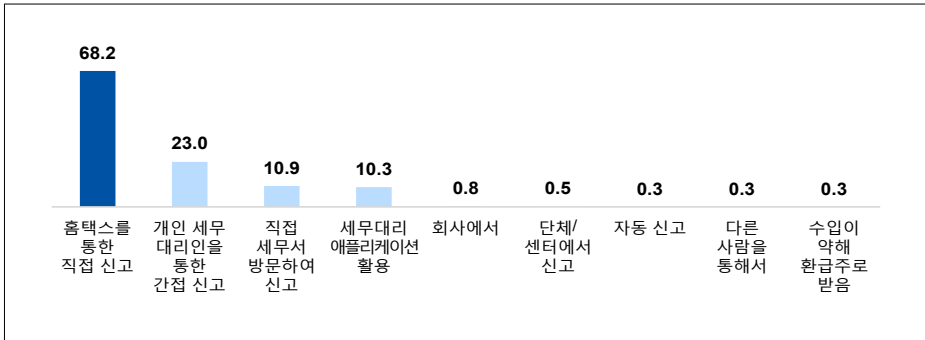
〈표 4-21〉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사례 수	예	아니요
■ 전체 ■		(500)	77.4	22.6
활동 장르	문학	(54)	59.3	40.7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93)	58.1	41.9
	사진	(17)	64.7	35.3
	음악	(81)	77.8	22.2
	대중음악	(24)	83.3	16.7
	국악	(35)	77.1	22.9
	무용	(5)	80.0	20.0
	연극, 뮤지컬	(64)	92.2	7.8
	영화	(69)	88.4	11.6
	연예(방송 포함)	(33)	97.0	3.0
	만화, 웹툰	(16)	100.0	0.0
	복수	(9)	88.9	11.1
활동 영역	창작	(236)	68.6	31.4
	실연	(146)	86.3	13.7
	기술(무대, 영상 등)	(56)	92.9	7.1
	기획/행정	(45)	73.3	26.7
	그 외	(17)	82.4	17.6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자(n=387)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은 대상,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68.2%)가 가장 높았고, ‘개인 세무 대리인을 통한 간접 신고’(23.0%),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10.9%), ‘세무 대리 애플리케이션 활용’(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간접 신고를 제외하면 모두 예술인 개인의 직접 신고이며 이는 전체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적은 예술인이 세무 대리인 비용 등의 지출 부담으로 세금 신고를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9]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중복 응답)

[Base: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자 n=387, Unit: 중복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세금 신고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를 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세무 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만큼 소득이 큰 편도 아니고요.”(FGI 참가자 H, 30대/남성/영화/실연)

“저도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직접 누락된 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기일 후 신고를 해달라고 연락을 드려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FGI 참가자 G, 30대/남성/연극/실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을 받은 대상에 대한 문항에서는 ‘도움을 받은 적 없음’이 전체의 49.1%로 나타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는 ‘세무 대리인’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된 회사, 예술단체 등’(7.8%), ‘예술 분야의 노조, 협회, 단체 등’(3.6%) 등의 순이었으나 그 비율이 낮아, 예술인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을 준 대상(중복 응답)

[Base: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자 n=387, Unit: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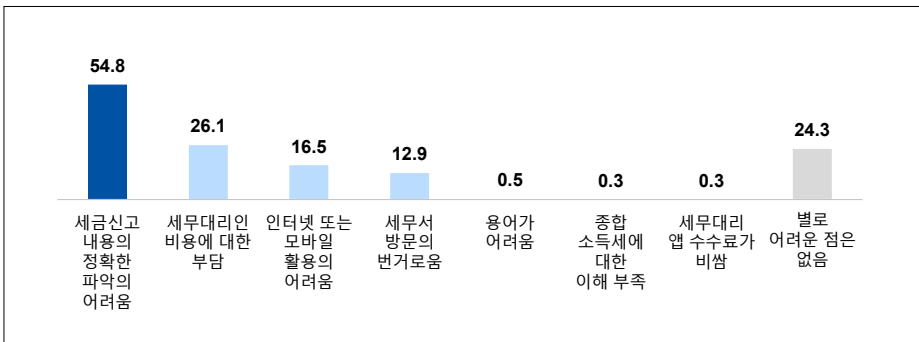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를 하는 편인데, 직원들이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가 어려워요. 최근에는 예술강사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조는 동종업계 동료이다 보니 예술인 소득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비교적 세금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FGI 참가자 I, 30대/여성/국악/실연)

종합소득세 신고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에서도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금 신고에 대한 교육과 안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세무 대리인 비용에 대한 부담’(26.1%),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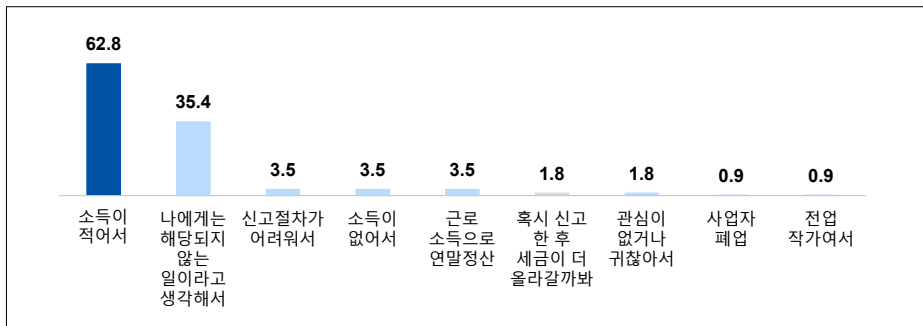
[Base: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자 n=387, Unit: 중복 %]



한편,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22.6%)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35.4%), ‘신고 절차가 어려워서’, ‘소득이 없어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의 소득이 적을 수록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로 생각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4-12] 종합소득세 미신고 이유(중복 응답)

[Base: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미경험자 n=113, Unit: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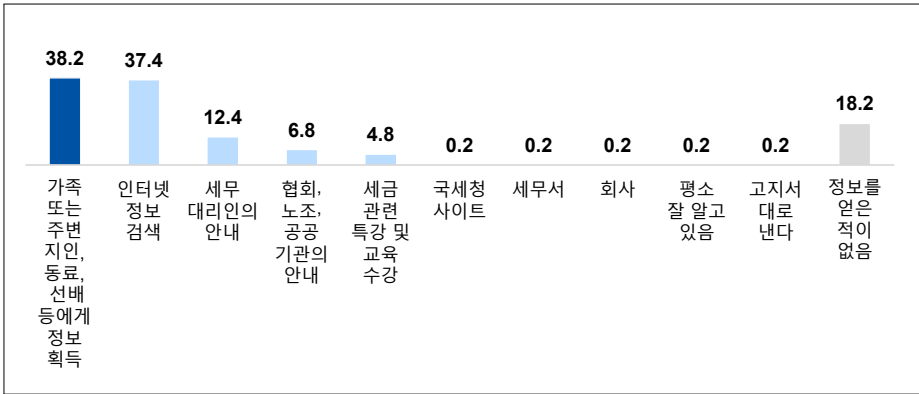
“주변 예술인에게 물어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는지를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득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세금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예술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창작하는 게 자신의 일이지 세금 신고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FGI 참가자 J, 40대/남성/국악/창작)

4.2.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예술인의 세금 신고는 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편이다 보니 관련 정보를 얻기에도 수월하지 못하다. 세금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동료, 선배 등에게 정보 획득’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정보 검색’(37.4%), ‘세무 대리인의 안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얻은 적이 없음’도 18.2%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세금 관련 정보 인지 경로(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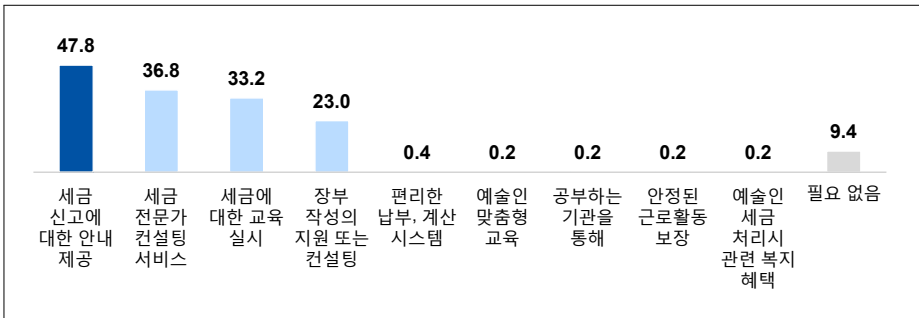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중복 %]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 제공’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36.8%), ‘세금에 대한 교육 실시’(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 응답)

[Base: 전체 응답자 n=500, Unit: 중복 %]



요컨대, 대부분의 예술인이 겪고 있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는 용어 및 절차상의 어려움이다. 예술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세금 신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인 예술인의 세금과 관련한 정책 지원으로 세금 교육과 세무 대리 비용의 지원이 작성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세금 관련 교육 외에도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나, 세무 대리인 비용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세무 상담원 및 컨설팅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예술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술인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조세제도나 세금 신고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FGI 참가자 D, 40대/여성/연극/창작)

“간혹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인을 위한 세금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술인들이 잘 찾아보지는 않아요. 인천문화재단에는 예술인을 위한 원천징수 계산기가 있고, 예술인 법률 자문도 오픈되어 있지만 활용도는 글썄요. 조금 더 상위 기관에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담당 세무사 지정이라든지요.”(박소울, 국악, 3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예술인의 소득세 유형과 인식 및 경험, 예술인이 체감하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대상의 설문 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소득의 유형은 사업소득(35.%)과 기타소득(19.2%)이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근로소득이 31.0%를 구성하고 있어 많은 예술인들이 단기계약 혹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예술인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에 관한 소득세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41.6%), 모른다(32.8%), 보통이다(25.6%)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세 납부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 사례비를 지급한 곳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71.4%),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35.2%), 세금 납부 하지 않음(8.0%), 소득없음(0.8%), 세무사를 통해서(0.6%), 근무 회사(0.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FGI 결과 예술인 대부분이 사례비를 지급한 곳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4%가 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하는 신고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68.2%),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10.9%), 세무 대리 애플리케이션 활용(10.3%) 등 주로 예술인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은 적 없음이 49.1%, 세무 대리인이 32.6%로 조사되어 명확한 정보 없이 세금 신고를 진행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 정보를 수취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이 소득세 신고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54.8%)으로 나타나 예술인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나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향후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예술인들은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 제공’(47.8%), ‘세금에 대한 교육 실시’(33.2%) 등 세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다 보니 ‘세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36.8%)와 ‘장부 작성의 지원 또는 컨설팅’(23.0%)에 관한 정책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 소득은 최저 721.1만 원에서 최고 2974.9만 원으로 나타나 평균 2253.8만 원의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장르는 만화/웹툰(5512.9만 원), 가장 격차가 적은 장르는 대중음악(1112.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 예술인들에게서도 높은 소득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의 연 소득 중 예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술인이 체감하는 연 소득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해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율에 있어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일부 해외 국가들은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자 소득 평균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예술인 또한 소득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 상당히 많은 경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 임차료, 식비·다과비를,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임차료, 교통비, 교육·훈련비를, 프로젝트별로는 임차료, 식비·다과비, 교통비를 가장 많이 소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개인의 수입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상당수가 이러한 비용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충당하고 있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내역이 많아서 실제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술인의 직종 내에서도 경비 인정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 배우나 가수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모두 인정 범위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연 분야의 예술인들은 기술 분야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경비율을 인정받는 창작 분야보다도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배우나 가수의 경비 인정율은 반드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매우 적고 이에 대한 불만이나 수요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은 개인이 혼자 수행해야 하지만,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나 안내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예술 분야 협회나 노조,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예술인을 위한 세무 교육 또는 세금 신고 교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예술인의 세금과 관련해 바라는 정책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알기 쉽게 구성된 세무 교육,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책자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기적인 세금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제5장

예술인을 위한
소득세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의 제언

제1절 예술인의 합리적인 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공제 항목의 추가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근로소득, 월세, 전세대출금 상환액,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비롯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노란우산공제와 기장세액공제만을 적용하고 다른 세액 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것인데, 근로자의 경우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회사가 지拂하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소득 공제율보다 사실상 경비를 덜 소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도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만, 경비율은 납세자에 따라 인정받는 범위의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사실상 소득공제는 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에만 특별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에 모두 차별 없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별 필요경비 이외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는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기본 원칙이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로자에게만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은폐가 어려운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가 그동안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세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근로소득과 상당 부분이 은폐되는 사업소득에 동등한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한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주려는 것이다.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의 은폐 및 탈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실신고임을 확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이러한 공제제도의 차이가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4대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소득의 은폐나 탈루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국세청의 추적 조사 기능이 매우 고도화되어 이러한 은폐나 탈루를 추적하고 잡아낼 수 있는 장치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제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소득자 중에서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세금을 낮추는 시도를 하는 이들도 아직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제한은 별도로 진행하되, 사회가 변화하고 사업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예술인을 비롯한 인적용역사업 소득자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같은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또한 예술인들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세제도에서도 막연한 탈루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과세소득의 은폐, 탈루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동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전세대출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4장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었고, 중·단기적으로는 ‘임차료’를 가장 많이 소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택을 작업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예술인들에게 있어 임차료와 관련한 비용은 직업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고려할 만한 부분이다. ‘의료비’ 또한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연, 영상 분야에서 실연 분야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비가 직업 생활과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예술인들은 지속적인 창작 능력 향상 및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반드시 직업 생활과 연관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 또한 예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직업 생활과 큰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 대부분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들은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비롯한 사업소득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예술인 직종 간 합리적인 경비 인정율의 조정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고시한 예술인의 필요경비율을 보면 배우와 가수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필요경비율 인정 정도가 낮다. 배우와 가수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도 경비 인정율이 낮고 실효세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와 가수가 다른 예술 업종에 비해 필요경비율이 다소 낮을 수는 있어도,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비용을 거의 대부분 회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황이며, 많은 회사들이 식대나 통신료 등을 연봉에 포함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출퇴근 비용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요하는 필요경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표 3-7〉 참고)

그러나 배우나 가수의 경우 신체를 사용해 표현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적어도 근로자보다는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분야와 함께 실연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은 교육·훈련비와 임차료 등이, 지난 1년간은 임차료와 교통비 등이, 프로젝트 하나당 임차료, 식비·다과비, 교통비 등이 많이 소요되었다. 실연 예술인들이 많이 사용한 교육·훈련비에는 정규 교육인 학교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배우의 경우 다음 작품을 위해 승마를 배우거나 발성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의 훈련 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이처럼 업무상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나 가수가 근로자에 비해 더 필요경비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비 인정율 수준을 고려하면 배우나 가수는 업무 수행에 부대 경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어떠한 투자나 비용 지출 없이 인력 그 자체로 모든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배우와 가수와 같은 실연 분야 예술인들은 한번 익히 기술을 평생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투자해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보다는 경비 인정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예술인 직종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배우와 가수의 경비 인정율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1년을 주기로 보았을 때 실연 분야는 기술 분야 다음으로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경비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창작 분야보다 많았다. ‘가수’의 경우 거의 유사한 업무 형태를 보이는 ‘성악가’보다 경비 인정율이 낮는데, 가수는 단순경비율 22.3%, 기준경비율 6.9%를 인정하는 것에 반해, 성악가는 단순경비율 53.1%, 기준경비율 17.6%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배우나 가수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었다. 기술 분야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과 각종 임차료, 운송료 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며 이는 개인 비용으로 충당할 때가 많다고 한다. 최근 예술 분야의 기술직들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로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 직종의 합리적인 경비 인정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 분야의 직종들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격차가 꽤 큰 편이다. 단순경비율이 낮은 배우와 가수의 경우에는 격차

가 각각 18.6% 포인트와 15.4%포인트이지만 다른 업종들의 경비율 격차는 35% 포인트를 상회하고, 최대치인 화가의 경우에는 53.5% 포인트에 달한다. 이렇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것은 각 직종별 경비 인정율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으며, 현실을 잘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상황도 드러낸 것이다. 예술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고 수익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예술인 직종에 대한 종합적인 경비 인정율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경비 인정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필요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 분야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으로 이러한 격차는 세부담에 대한 공평성 문제와 과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서는 인정받았던 것이 소득 수준의 구간이 넘어가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경계선 부근에서 소득이 약간만 상승하여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능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소득을 3천6백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초과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조세회피의 형태가 유발될 수 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세회피 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고 소득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는데(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격차가 큰 문제는 주요경비에 대한 인정이 매우 적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주요경비는 원재료 등을 매입한 비용과 사업장을 임차하는 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합계한 금액인데,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증빙이 가능한 경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인건비의 경우 어느 정도 증빙 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조사한 결과와 같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차료의 경우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의 상당수가 별도의 사무실이나 연습실, 작업장을 두기보다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2021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 밖에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7.0%로 대부분 집 안 공간에 보유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³⁾. 또한 매입 비용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개인 생활의 비용과 직업 생활(예술 활동)의 비용이 뒤섞여 직업 생활에 소요된 비용만을 따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로 우리나라 현 제도 체계 내에서는 프리랜서의 주요경비에 대한 인정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호주의 경우는 우리보다 이러한 경비율의 인정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3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호주는 추계과세제도에 의한 단순경비율의 개념이 없고 모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비용 공제 범위가 매우 넓은데, 재택사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점유비, 운영비, 사업용 자동차 운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임대로 인한 대출이자, 임대료, 보험료 등에도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택에서 작업하는 예술인을 비롯한 프리랜서들도 작업실 비용, 운영비, 임대료 등을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예술인들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비용 중 하나로 꼽은 교통비와 관련해서도 사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증빙되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신비, 사무실 유지비, 청소비 등에 대한 것도 인정 항목에 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택의 경우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차량의 경우 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이 어렵다.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라도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 생활 비용과 엄격히 구분하여 지불하고 주요 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 예술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단순경비율은 이러한 경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우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103)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우리나라도 임대료, 매입 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인정 기준은 있다. 그러나 호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주요경비 인정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택에 있는 공간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경우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판이 있어야 한다면, 구간이 명확한지 여부라든가, 그 곳에서 일어난 활동을 밝힌다면 등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운영비 인정에 있어서도 기장의 성실성과 명확성을 판단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비율을 주어서 인정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주만큼 이러한 비용의 인정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주요경비를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과도하게 경비 처리를 하여 세금 할인을 시도했던 도덕적 해이의 사례 때문이었다. 이에 남용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근무 형태의 다양화로 자택 근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점차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아예 차단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해 기준을 명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경비가 가사생계 관련 경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경비와 생활 경비가 매우 뒤섞여 예술인 스스로도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비 혼재의 경우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대부분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재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택 유지 비용 중 업무용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동차 비용 중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도한 비용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실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사생계 비용과 혼재된 경비를 경비 항목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과 산입하는 비용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소득평균화를 적용한 소득세제 도입의 검토

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소득평균화 적용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업종,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고용관계로 계약을 맺으며 월급 또는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비정기적이고 다양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입의 형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근무 형태가 다른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소득세의 측면에서 수입을 제공하는 대상이 다수이거나 소득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고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소득의 큰 변동성은 예술인이 일반적인 근로자 등 다른 직업군과 가장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제4장의 조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예술인들은 연 소득의 변동성은 매우 큰데, 연 소득 평균 최저액은 약 721.1만 원이고 평균 최고액은 약 2,974.9만 원으로 약 2,253.8원의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의 해당 수입에 부과하는 이 제도는 갑자기 많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그 예술인의 일생 전체를 보았을 때, 평생에 걸쳐 똑같은 금액을 벌지만 여러 해에 나누어 일정하게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겪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일생을 종합해 보면 일정하게 월급을 받거나 차근차근 수입이 올라가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오랜 준비기간을 걸쳐 작품을 발표하면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은 매우 제한된 기간에 벌어들이게 되지만 이는 사실상 과거 오랜 준비기간을 통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결과물이 발표되었을 때 한꺼번에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 수입이 갑자기 커졌을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세금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나 스페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생소득(life time income)의 관점에서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탄화(smoothing)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현재 구체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호주는 예술인을 비롯한 발명가, 운동선수 등의 전문가들을 위한 과세제도를 만들어 과거 4년간의 소득 평균에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 적용을 위한 산식 또한 구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중이다. 호주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당해 연도 과세 원칙과 누진세율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변동성이 매우 큰 특정 납세자가 누진세율의 허점으로 불리해지지 않게 하여 과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스페인도 「예술가법 보고서」를 통해 소득평균화제도를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 또한 소득평균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발행된 아일랜드 재무부의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¹⁰⁴⁾,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에 대한 폐지 주장을 검토할 때 결국 유지를 선언하면서도 제도가 가지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 대안으로 소득평균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인 지원 정책인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가 아일랜드 내 예술인의 정주와 예술 활동 지원에 효과적인 역할은 했지만, 특정 직업군에게 연 5만 유로까지 일방적으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이 제도는 끊임없이 과세형평성의 논란을 가져왔고 폐지 주장과 맞서야 했다. 또한 오리지널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에 있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는 비단 창작예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예술인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및 편익 차원에서 주장하기에는 다른 분야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그 혜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예술인이 가진 소득 구조가 현재의 과세 체계에서는 불리함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소득평균화의 도입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는 제도로 검토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소득평균화는 예술 분야와 함께 농업 분야에도 적용할 것이 고려되었는데, 현재는 농업 분야에 먼저 적용이 되고 있다. 농업

104) The Arts Council(2005). Op. Cit..

도 그 해의 날씨, 천재지변에 따라 농사 성과가 매우 변동성이 크므로 이들의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 있음을 고려해 소득평균화를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예술가 소득세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소득 예술인의 기록은 알기 어렵고, 예술가 소득 면세제도의 유지에 대한 예술계의 주장이 더 강한 상황이어서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¹⁰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외의 많은 나라가 도입을 검토하듯이, 예술인의 높은 소득변동율을 고려한 소득평균화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형평성의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술인도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적용받는 데에 있어 직업적인 특징 때문에 겪는 불리한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변동성의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 뿐만 아니라 소득변동성이 큰 많은 직업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직업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몇 년에 걸쳐 한 작품을 작업할 수 있기에 한 작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특정 시기에 발표했더라도 사실상 몇 년에 걸쳐 벌어들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술인에 비해 정규직 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더욱 강한 농업민이 소득평균화를 주장한다면, 프리랜서로서 수입 불안정성이 강한 예술 분야는 더욱 소득평균화의 대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장르, 작업 특성, 직종에 따라 그 기간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평균화 적용의 장기적 논의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그러나 소득평균화 제도는 현재의 우리나라 과세체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에 장애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는 1년을 단위로만 진행한다. 이전 연도의 일정 기간을 평균값을 내거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아직 적용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105) The Arts Council(2005). Op. Cit..

그러나 당해 연도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나 스페인 등은 소득평균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과세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여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종의 탄생과 수입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제도의 수정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향후 미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소득평균화 적용은 예술인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이 세부담에 있어서도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 제도를 적용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수준의 제도 적용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동안 ‘예술인 지원정책’이 지향했던 바와 결을 같이한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지원정책)이 꾸준히 추구해 온 것은 예술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이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다른 직업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제도 안에 포섭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에 대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과 같은 소득변동성이 매우 큰 직업군을 위한 소득평균화도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닌 이러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평균화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는 현재의 과세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먼저 업종분류번호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할 때, 예술인에 해당하는 업종분류번호 92나 94의 경우 자동적으로 소득평균화를 적용하고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수입이 발생할 당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입이 다른 해에 비해 소득변동성이 큰 수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소득변동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변동성에 따른 평균화는 원천징수 당시보다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의 수입이 다른 연도에 비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누진세율을 과도하게 적용받는다고 판단될 때, 해당 납세자가 소득평균화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득평균화 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해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업종분류번호를 확인하고,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세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할인되는 세금은 미래에 나누어 내기 보다는 현재의 성과를 과거 몇 년간에 걸친 성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래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미래의 소득을 예측할 수 없다는 면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3년간 준비한 작품의 발표로 한 해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을 경우, 이 수입을 과거 3년간의 성과로 보고 수입 전체를 3년으로 나누고, 평균화된 1년치의 수입에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3년을 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납세자는 3년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만,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소득변동성을 고려한 평균화의 적용은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적용하고 있는 호주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한 스페인의 경우 산식이 서로 다르다. 각각의 국가의 상황과 제도의 구성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산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소득평균화를 적용한 사회보험료의 연동 필요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변동성이 커서 소득신고액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의 기여금 또한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많은 예술인들은 갑자기 큰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매우 큰 예술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변동성이 큰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고, 누진세율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이 지속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변동 보험료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은 발급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살펴본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지적되고 있는데, 매년 건강보험료를 고지받은 이후 부과된 보험료의 조정을 위해, 참여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문제는 예술단체 또는 기업 중에는 단기간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폐업한 경우 이러한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잦고, 예술인들은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그냥 납부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예술단체나 기관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다음 캐스팅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요청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소득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가입자, 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던 문제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이다.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5월이 지나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가 보내지고,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지역가입자에게 청구된다. 이때 전년도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의 부과 시점이 10개월에서 최대 3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지난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발표되어 2023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소득변동에 따른 차이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재정산하여 나중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년도 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더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⁰⁶⁾

이러한 사후정산제도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소득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갑자기 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변동성이 큰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고, 누진세율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평균화가 적용된다면, 이러한 평균화 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연동해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더해 계산한다. 만약 소득평균화가 적용된다면 이러한 종합소득세 결과가 소득평균화 제도를 적용한 결과로 산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 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증가한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누진세율처럼 과도하게 변화하는 보험료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106) 서한기(2022. 11. 04.).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돌려받는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52685?sid=102>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득세의 평균화뿐만 아니라 보험료 또한 어느 정도의 평균화를 이룩하며 보험료 기여금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득평균화가 적용되었을 때 가능한 일로, 현재 소득변동성으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해촉) 증명원의 발급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상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주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퇴직(해촉)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인일수록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기관 또는 단체부터 예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퇴직(해촉)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술인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보면 국공립 기관 또는 단체조차 예술인의 건강보험료와 퇴직(해촉) 증명원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예술인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도 다수이다. 단기 계약직 단원제 또는 프로젝트별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국공립 예술단체와도 점차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겪는 사회보험 문제에 대해 더욱 인지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 기간이 길지 않거나 단기간 프로젝트성 단체 조직이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이미 사라진 단체에 퇴직(해촉) 증명원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들 중 상당수는 공공지원금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과의 연동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퇴직(해촉) 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예술인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1. 개인 생활과 예술 활동의 비용을 분리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

앞서 살펴본 프리랜서 예술인의 주요 활동 경비의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예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사용한 경비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 경비 인정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다. 임차료의 경우 전체 임차료에서 인정 비율을 산정해 인정할 수 있고, 차량의 경우 업무용을 사용한 일지 등을 제출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각종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등은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앞서 제4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임차료와 교육·훈련비를 가장 많이 비용으로 소요하고 있었지만, 식비·다과비, 교통비, 악기·장비구입비, 숙박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해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개인 생활 비용과 뒤섞여버린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인터뷰 도중 개인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비용이 사실은 예술 활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술 활동의 공간과 시간이 개인생활과 분리되지 않다보니 이러한 구분이 희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비 지출의 방법도 일상생활 경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인이 장부를 기재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된다. 고소득 예술인의 경우 세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보니 경비 인정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장부를 기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 세무 대리인을 활용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지나 장부 작성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비 인정이 적용되고 예술인들을 비롯한 많은 프리랜서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술인들이 장부 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단순경비율의 개념이 없어서 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납세자가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술인이 세무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도 직업 활동에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들은 개인생활 비용과 직업 활동의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손쉽고 명확하게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의 분리’이다. 개인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과 직업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인생활의 비용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경비로 인정을 신청할 영수증이 명확해진다. 장부의 기장도 매우 간단해져서 예술 활동 관련 비용 통장에 있는 내역을 적으면 되게 된다.

이러한 개인생활과 예술 활동의 비용 분리는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무관심해왔다. 단순경비율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비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 분야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예술인들의 수입과 지출의 항목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증가하면서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고, 장부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요경비에 대한 인정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처음부터 단순경비율의 개념이 없고 장부 작성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에 대한 분리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강했고, 실질적 경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발전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은 이러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경비 인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확화 되지 못했고,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 관례가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술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분업화되면서 개인 프리랜서 예술인의 활동도 개인 활동의 차원이 아닌 사업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인생활과 예술 활동을 분리하지 않았던 관례의 개선이 요구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비용이 개인용인지, 예술 활동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장부로 작성하는 훈련이 점차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술인의 소득세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확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예술인들의 77.4%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험하였고, 거의 절반이 전문 세무 대리인이나 소속된 회사 또는 예술 단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예술인들의 세금 신고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나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납세자 의식 개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세행정의 발전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자신이 신고하는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자신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정보도 없고, 무슨 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만큼 과세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상당한 편이었다.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내야 하니 내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내역서 같은 것이 없으니 무엇이 어떻게 부과되고 계산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세금 내라니까 잘 모르니까 내는 거죠. 예술인들이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분명히 뭔가 손해 보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뭘지는 모르겠어요.” (FGI 참가자 B, 40대/남성/문학/창작)

“제가 무슨 세금을 어떻게 부과 받고 내고 있는지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는 때도 있고, 갑자기 줄어드는 때도 있는데,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으니 답답할 뿐이죠.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FGI 참가자 D, 40대/여성/연극/창작)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세금 신고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었다. 예술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구조

에서 부과되고, 왜 그 금액을 내야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함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동료, 선배 등에게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지만 충분한 정보는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예술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온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예술인 대부분은 주변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일부 예술 관련 협회나 노조,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간헐적으로 교육이 제공된 적은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예술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장부 기장의 문제는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이를 위한 장부의 기장과 영수증 관리 등은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일부 예술경영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인 예술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예술계는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다 보니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많은 예술인들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차지하는 영향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고, 세금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예술인들은 소득세에 대한 동영상 강의나 가이드라인 책자 발행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예술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이해함으로써 이를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술계의 사례비에 대한페이백(pay-back) 관행도 소득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다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향후 예술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수입과 지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의 형태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 분야가 이렇게 산업화의 면모를 갖출수록 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올바르게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장부 기장과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부기장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예술인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었으나, 이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금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득 평탄화와 관련한 제도 등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술인들을 비롯한 소득 변동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특별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성실한 장부기장과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술계 스스로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대오, 이경미, 원윤희, 정지선(2012). 창작 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 방안 연구: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 강성모(2012). 문화·예술행사와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법연구 18(2). pp. 147-19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국세청.
- 국세청,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_6호, 2023. 3. 29.
- 권민(2021), 「미술과 세금」, 서울: 바른박스.
- 기획재정부(2022), 「2022년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 김노창, 배형남(2014).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14(2). pp. 167-190.
- 김성규(2023), 「문화예술단체 재원조성」, 서울: 이음스토리.
- 김영순(2012).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연구. 법학연구 15(2). pp. 363-385.
- 김유찬(2011).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1(1). pp. 317-340.
- 김정홍(2015).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조세학술논문집, 31(1). pp. 53-83.
- 김주일(2019).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 기술혁신연구,
- 김중일(2006). 문화관과 문화 정책 지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정책 지원에 대해. 한국문화기술, 제2호, pp. 25~37.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2). 「해외공연의 국제조세 해설집」.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한국문화정보원(2021),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준기, 박성재(2003).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예술경영지원센터(2022). 「202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병산(2020).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4(3). pp. 106-131.
- 이상규(2020),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성구(2022), 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세연구, 22(4), pp. 57-77.
- 이종한, 박순찬, 최종일, 임현철(202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 한국 문화정보원.
- 정현일, 박영정, 안중범, 최현주(2007).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차민경(2020), 「UNESCO <문화와 예술인의 노동 환경>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메세나협회(2021).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한국메세나협회.
- 한국메세나협회(2022), 「문화접대비 활용 Tip-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한국 메세나협회.
- 한국모금가협회(2022),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상실에 따른 법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 개선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정보원(2023),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 분석-체육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14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한미회계법인(2022),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 Globerman, Steve.(1980). Direct versus indirect aid to the arts: A Canadian perspectiv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4, No. 2. pp. 15-25.
- Irish Tax and Customs(2021), High-Income Individuals' Restriction Tax Year 2010 onwards, *Tax and Duty Manual*, Part 15-02A-05, June 2021, pp. 4~5.
- LEIRE GUTIÉRREZ VÁZQUEZ et al.(2023), MEDIDAS APROBADAS Y DESARROLLADAS EN EL MARCO DEL ESTATUTO DEL ARTISTA, Instituto Autor
- McAndrew, C. & McKimm, C.(2010).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artists i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The Arts Council/An Chomhairle Ealaíon and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p.156.

- Theater Forum(2020), Tax and Self-Employed Fact Sheet, *Theater Forum*, Vol. 3, April.
- The Arts Council(2005), *Testimonials on the Artists' Tax Exemption Scheme*. The Arts Council.
- UNESCO(2020). 「문화와 예술인의 노동환경」, UNESCO & 문화체육관광부.

기사

- 정유립(2014.02.06.). '메세나법' 제정,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 지원한다, 웰페어 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85>
- 서한기(2022.11.04.).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돌려받는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52685?sid=102>

인터넷 사이트

-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 국세청 www.nt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Australian Taxation Office www.ato.gov.au
- Irish Tax and Customs www.revenue.ie
-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

ABSTRACT

A Study on Income Tax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of Artists

Min-Kyung Cha

This study analyzed how South Korea's income tax system is applied to artists and what issues occur due to the unique attributes of artist works. After a research, it turned out that artists face higher tax burdens in the current system of accumulated taxation system and benefit less in the tax deduction because their annual incomes fluctuate by years. In particular, actors and singers were subject to higher taxes than company workers because the necessary expense rate is set lower compared with other workers.

Keywords

Artists, support of artists, income tax, income averaging

예술인의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부록

설문지

부록: 설문지

「예술인 세금 관련 인식 현황 및 수요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콘텐츠·데이터 분야의 정책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 신고 현황 및 애로 사항, 관련한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 내주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선착순 500분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제공해 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의 통계 활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주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① 일반 현황

1. 귀하의 다음 인적정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만 나이 기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주요 활동 장르	① 문학 ②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③ 사진 ④ 건축 ⑤ 음악 ⑥ 대중음악 ⑦ 국악 ⑧ 무용 ⑨ 연극, 뮤지컬 ⑩ 영화 ⑪ 연예(방송 포함) ⑫ 게임 ⑬ 만화, 웹툰 ⑭ 복수
활동 영역	① 창작 ② 실연 ③ 기술(무대, 영상 등) ④ 기획·행정 ⑤ 그 외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② 예술 활동 소요 비용

※ 다음은 귀하가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 주세요.

2-1. 귀하가 지난 10년간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대략적으로 답해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항목	10년간 소요 비용 총액	항목	10년간 소요 비용 총액
교통비	약 _____만 원	자료 조사비 (도서 구입, 현장 조사 등)	약 _____만 원
숙박비	약 _____만 원	소모품비	약 _____만 원
통신비	약 _____만 원	의상·소품비	약 _____만 원
임차료 (연습실 등)	약 _____만 원	헤어·분장비	약 _____만 원
교육·훈련비 (학교, 레슨, 워크숍 등)	약 _____만 원	수리비 (악기, 장비, 프로그램 등)	약 _____만 원
식비·다과비 (접대비, 회의비 등)	약 _____만 원	악기·장비 구입비	약 _____만 원
운송비 (작품, 악기 운송 등)	약 _____만 원	기타	(기타 항목 작성)

2-2 귀하가 지난 1년간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대략적으로 답해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항목	1년간 소요 비용 총액	항목	1년간 소요 비용 총액
교통비	약 _____만 원	자료 조사비 (도서 구입, 현장 조사 등)	약 _____만 원
숙박비	약 _____만 원	소모품비	약 _____만 원
통신비	약 _____만 원	의상·소품비	약 _____만 원
임차료 (연습실 등)	약 _____만 원	헤어·분장비	약 _____만 원
교육·훈련비 (학교, 레슨, 워크숍 등)	약 _____만 원	수리비 (악기, 장비, 프로그램 등)	약 _____만 원
식비·다과비 (접대비, 회의비 등)	약 _____만 원	악기·장비 구입비	약 _____만 원
운송비 (작품, 악기 운송 등)	약 _____만 원	기타	(기타 항목 작성)

2-3. 귀하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대략적으로 답해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항목	개인 소요 비용 총액	항목	개인 소요 비용 총액
교통비	약 _____만 원	자료 조사비 (도서 구입, 현장 조사 등)	약 _____만 원
숙박비	약 _____만 원	소모품비	약 _____만 원
통신비	약 _____만 원	의상·소품비	약 _____만 원
임차료 (연습실 등)	약 _____만 원	헤어·분장비	약 _____만 원
교육·훈련비 (학교, 레슨, 워크숍 등)	약 _____만 원	수리비 (악기, 장비, 프로그램 등)	약 _____만 원
식비·다과비 (접대비, 회의비 등)	약 _____만 원	악기·장비 구입비	약 _____만 원
운송비 (작품, 악기 운송 등)	약 _____만 원	기타	(기타 항목 작성)

③ 소득 현황 및 세금 신고 경험

※ 다음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 단체 및 기업, 프로젝트의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만 기입해 주십시오.

3-1. 귀하께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개인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와 가장 적게 발생했던 해의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이 가장 많았을 때(연소득)	연 _____만 원
소득이 가장 적었을 때(연소득)	연 _____만 원

3-2. 귀하의 개인 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주세요.

번호	소득의 종류	설명 및 예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정규직 또는 계약직 단원, 또는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 월급 또는 연봉 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프로젝트에 출연(노동, 참여)하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 경우.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작업에만 한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 월급 또는 연봉 단위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용역을 제공했을 때에만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예술인이 스스로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다른 예술인을 고용해 일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주된 직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으로 특정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 인적용역: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 - 예술인이 평소에 하지 않는 용역을 어쩌다가 하고 얻은 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특강을 하거나, 원고를 쓰거나, 공모전 상금을 받거나, 미술작품의 양도소득, 인세(印稅) 등으로 받은 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를 잘 모름	

3-5-1-1. [① 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 ②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 ③ 개인 세무 대리인을 통한 간접 신고
- ④ 세무 대리 애플리케이션 활용(예. 삼짍삼 등)
- ⑤ 기타 ()

3-5-1-2. [① 번 응답자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세무서 방문의 번거로움
- ②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 ③ 세무 대리인 비용에 대한 부담
- ④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
- ⑤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음
- ⑥ 기타 ()

3-5-1-3. [① 번 응답자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도움을 받은 적 없음
- ②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
- ③ 소속된 회사, 예술단체 등
- ④ 예술 분야의 노조, 협회, 단체 등
- 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 ⑥ 기타 ()

3-5-2-1. [② 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나에게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② 혹시 신고한 후 세금이 더 올라갈까 봐
- ③ 신고 절차가 어려워서
- ④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서
- ⑤ 소득이 적어서
- ⑥ 기타 ()

④ 세금 관련 애로 사항 전반

※ 다음은 귀하가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거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4-2. 귀하는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정보를 얻은 적이 없음
- ②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동료, 선배 등에게 정보 획득
- ③ 세금 관련 특강 및 교육 수강
- ④ 세무 대리인의 안내
- ⑤ 인터넷 정보 검색
- ⑥ 협회, 노조, 공공기관의 안내
- ⑦ 기타 ()

4-3. 귀하의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세금에 대한 교육 실시
- ②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 제공(책자 또는 온라인)
- ③ 세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 ④ 장부 작성의 지원 또는 컨설팅
- ⑤ 필요 없음
- ⑥ 기타 ()

4-4. 그 외 예술인의 세금과 관련해 바라시는 정책 지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필 내역

연구 책임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5장

공동 연구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2장 제1절 일부, 제4장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제2장 제2절, 제3장
김재중 한미회계법인 연구원: 제2장 제1절, 제4장 일부

연구 참여

김연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73-4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3>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차민경·황아람·안종석·김재중(2023), 예술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3>

